

다 · 셋 · 마 · 앙

정치  
행정  
산업·경제  
기업  
사회  
복지·의료



# 목포시사

문·화·무·의

## 3 일등 목포

정치  
행정  
산업·경제  
기업  
사회  
복지·의료





노적봉 시민종각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포역 앞에 모인 시민들(1980, 박종길 소장)





목여고 운동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유세에 운집한 시민들(1980, 박종길 소장)



목포MBC 부근 옛 목포버스터미널(1977, 박종길 소장)





남해개발지구 황토매립 작업(1977, 박종길 소장)



목포중앙병원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옛 목포공단(1975, 박종길 소장)

## | 일러두기 |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구성

- 제1권 「항도 목포」는 자연환경부터 시작하여 도시형성과정, 해운항만산업, 그리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목포 역사 및 문화유산을 정리하였다. 목포의 공간적 특징과 그 안에서 전개된 역사·문화의 배경, 주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권 「예향 목포」는 문학을 필두로, 음악·연극·무용·국악·대중가요·마당극 등의 공연예술, 미술·조각·서예·사진 등의 시각예술과 관광·체육, 민속, 종교, 교육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포 정신문화의 전개 과정과 고유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 제3권 「일등 목포」는 목포의 정치, 행정, 산업 및 경제, 기업, 사회, 복지 및 의료 등으로 구성하였다. 목포 지역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분야별 형성·발전·변화 과정을 밝힘으로써 현재 목포의 사회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제4권 「터전 목포」는 목포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평범한 토박이들의 이야기와 마을 유래, 그리고 목포의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목포시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목포가 기억해야 할 인물들을 처음으로 한 데 모아 정리했다.
- 제5권 「기록 목포」는 1~3권의 부록에 해당하는 현황 자료와 목포 관련 문헌·사진·물증자료 등의 역사 자료로 구성하였다. 역사 자료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알리고,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훗날의 사료가 되도록 했다.

### 서술 범위

- 시간적 범위 : 선사시대부터 목포시사 편찬을 시작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하한 범위로 하되, 주제별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자료까지 반영하였다.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자료 이용 시 주의 사항

- 다섯 마당 『목포시사』의 저작권은 목포시에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개인 및 기관·단체가 제작·소장한 사진 등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목차

contents



## 개관

일등 목포 .....	15
1. 『목포시사』 3권 '1등 목포'의 구성 .....	15
2. 역사 속에 나타난 1등 목포 .....	18

## 제1편 목포의 정치

제1장 지역정치 1번지, 목포 정치의 전개 .....	23
제1절 제1공화국 시기: 정당정치의 태동과 야당도시화 .....	23
제2절 제2공화국 시기: 민주당 단일 정당 내 경쟁 .....	35
제3절 제3·4공화국 시기: 야당도시에서 여야 동반 당선까지 .....	36
제4절 제5공화국 시기: 여야 동반 당선 .....	50
제5절 제6공화국 시기: 김대중의 정치적 후광과 민주당계의 독주 .....	55
제2장 지방자치와 목포의 지방선거 .....	71
제1절 1950년 지방자치의 출발과 목포의 지방선거 .....	71
제2절 지방자치의 부활과 지역정치의 독점: 1991년 지방선거 이후 .....	74
제3장 목포의 정치 참여 .....	81
제1절 목포의 투표 참여 .....	81
제2절 목포의 공직선거 후보 참여 .....	84

## 제2편 목포의 행정

제1장 지방자치 이전의 목포시 행정 .....	89
제1절 목포부의 행정 .....	89
제2절 지방자치 이전의 목포시 행정 .....	92
제2장 지방자치시대의 목포시 행정 .....	97
제1절 행정구역 .....	97
제2절 부활한 지방자치와 목포시장 .....	100
제3절 목포시 행정조직 .....	105
제4절 목포시 공무원 .....	119
제5절 목포시 재정 .....	125

## 제3편 목포의 산업 및 경제

제1장 목포시 경제의 특징과 변화 .....	143
제1절 목포시의 GRDP의 구성 .....	143
제2절 입지계수법을 이용한 목포시의 경쟁 우위 산업 도출 .....	144
제2장 목포시의 농업 .....	149
제1절 농가호수와 농가 인구 .....	149
제2절 경지 면적 및 호당 경지 면적 .....	151
제3절 경지 이용 면적 .....	152
제4절 작물 생산량 .....	154
제5절 농기계 보유 현황 .....	158
제6절 정부 관리 양곡 보관 창고 현황 .....	159



# 목차

contents



제3장 목포시의 축산 .....	161
제1절 가축 사육 현황 .....	161
제2절 가축 방역 실시 현황 .....	162
제3절 수의사 분포 현황 .....	163
제4장 목포시의 임업 .....	165
제1절 산림 현황 .....	165
제2절 조림 실적 .....	168
제5장 목포시의 광업 및 제조업 .....	171
제1절 목포시 광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	171
제2절 목포시 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	172
제3절 목포시 광업 및 제조업의 현황 .....	174
제4절 목포시 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176
제5절 공업단지 현황 .....	181
제6장 목포시의 상업 및 서비스업 .....	189
제1절 상거래 .....	191
제2절 서비스 업체 .....	197
제3절 금융 .....	199
제7장 목포시의 무역 .....	205
제1절 수출입 실적 .....	205
제2절 항만 .....	211
제8장 목포의 수산업 발달사 .....	217
제1절 전근대시대 목포의 수산업 .....	218
제2절 현대 목포의 수산업 .....	250

## 제4편 목포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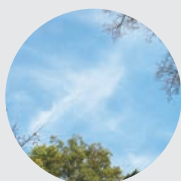
제1장 서론	267
제2장 개항 이후	271
제1절 목포상객주회와 무안사상회사	271
제2절 외국인 상인의 등장과 목포상업회의소	274
제3절 개항 직후 목포의 근대 기업	277
제3장 해방 후~1950년대 목포 경제의 쇠퇴와 지역산업의 재편성	289
제1절 지역산업의 재편성	289
제2절 금융업의 재편성	292
제3절 재건된 지역기업	294
제4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재편	302
제5절 수산업의 재편과 협동조합	302
제4장 1960년대 후반 이후 목포 경제의 침체	305
제1절 지역 경제의 침체	305
제2절 지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	308
제3절 부문별 기업 실태와 목포를 이끈 기업	309
제4절 지역 경제의 이슈들: 삼학양조의 파산과 목포공단 조성	316
제5절 목포상공회의소의 운영과 5대 기업인	317
제5장 1988년대 이후 목포 경제의 발전기	319
제1절 대불국가산단	320
제2절 조선업종의 도약 및 조선 대표기업	322
제3절 사라지는 기업, 도약하는 기업	324
제4절 교통 및 운수기업	327





# 목차

contents



제6장 목포상공회의소 변천사 .....	329
제1절 개항기 민족계 상인들의 단결에 의한 태동과 일제 강점기 .....	329
제2절 8·15 해방 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격변기 .....	330
제3절 1952년 상공회의소법 공포 이후 .....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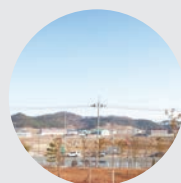
## 제5편 목포의 사회

제1장 목포의 시민운동 .....	341
제1절 목포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의 성장 .....	341
제2절 목포 시민운동의 영역과 역할 .....	347
제2장 목포의 노동 운동 .....	385
제1절 1980~1990년대 목포 지역 노동조합의 민주화 투쟁 .....	386
제2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 단체 민노협 결성 .....	396
제3절 목포 지역 노동운동의 현재 .....	398
제3장 목포의 언론 .....	403
제1절 신문 .....	403
제2절 방송 .....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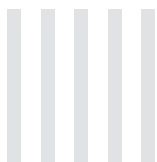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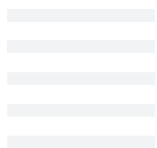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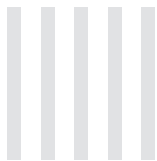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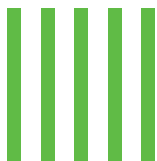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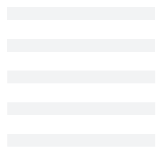
## 제6편 목포의 복지 및 의료

제1장 목포시의 사회복지 .....	423
제1절 목포시의 사회복지 개념 태동 .....	423
제2절 목포시 사회복지 발전과정과 과제 .....	431
제3절 목포시 주요 사회복지 정책 .....	468

제2장 목포시의 보건·의료 .....	473
제1절 개항 이후 지역 의료계의 발전과정 .....	474
제2절 광복과 지역 의료계의 도약 .....	480
제3절 의료보험시대와 의약분업 .....	488
제4절 신성장시대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 .....	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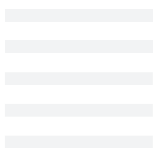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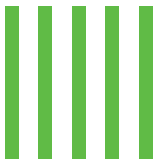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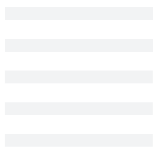


3권\_일등 목포



일등 목포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개관

### :일등 목포

#### 1. 『목포시사』 3권 ‘1등 목포’의 구성

『목포시사』 3권의 대주제는 ‘1등 목포’이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성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삶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리적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일 것이다. 공간을 이루는 기반은 사람이고, 정치, 경제 및 산업, 행정, 사회체계 등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 속에서 경쟁력 있게 살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 속의 목포는 각각의 분야에서 늘 1등을 지향했으며 지식정보화시대인 현대사회에 접어들어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육성, 지역민의 삶의 질, 문화수준 등 사회인프라는 지역발전과 성장에 결정적 흐름을 제공하였다. 이 점을 고려하여 3권을 기술하였는데 3권의 구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목포의 정치’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였던 독립운동 세력들은 자주정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치 활동을 목포에서 시작하였다. 6·25 전쟁 이후부터 제1공화국의 종말까지, 제2공화국 이후 목포가 대표적 야당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제5공화국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목포의 선거 및 정치상황 등을 정리하였다. 또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실시된 목포의 지방선거과정 등을 기술하였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 목포의 지방자치, 지방선거 과정 및 결과 등을 기술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5·16 군사정변 이후 중지되었다가 1991년 3월 실시된 제4대 목포시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의 지방자치 부활 과정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는 ‘목포의 행정’이다. 목포시의 행정 구역은 통치적 성격인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소극적 의미에서는 목포시 정부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법적 효과를 갖

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그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주민)를 당연히 그 도시정부의 구성이 되게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단위이다. 해방 이후 1949년 8월 15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부가 시로 개칭될 때까지의 목포부윤들의 기록이 정리되었다. 1960년에 모든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 졌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 의회가 해산되고 30여 년간 지방자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1년에 이르러 지방의원 선거가 다시 실시되어 1995년 6월에는 자치단체장의 직선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가게 된 과정들이 정리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게 되는데,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행정 수요가 증대하면서, 또 관료기구의 속성인 팽창경향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기도 했고, 때로는 과다하게 커지거나 행정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에 대해 인위적인 축소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목포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로서 그간 변화했던 모습들이 정리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재정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제 부활 초창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 많이 도입되었다. 1991년에 도입된 지방양여금제도와 자치복권의 발행근거 확보, 1992년 지역개발세의 신설 및 탄력세율 제도의 도입 등과 함께 목포시 지방세입의 변화도 정리하였다.

세 번째는 ‘목포의 경제’이다. 크게 ‘목포의 산업’, ‘목포의 기업’, ‘목포의 상공회의소’, ‘목포의 수산업’이라는 네 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하였다. ‘목포의 산업’에서는 목포가 항구도시로 발달하게 된 목포 경제의 특징과 변화를 살피고 농업, 광업 및 제조업, 상업 및 서비스업 그리고 목포시의 무역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목포의 기업’에서는 목포가 근대화 초기 시절부터 국제도시의 성격을 가진 7개국의 다국적 도시였고, 목포문화원에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 일대의 구도심 지역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계획화된 1백 년 도시의 틀을 갖췄던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재건기 및 경제개발계획단계의 발전기를 설명하고 있다. 개항 후 목포 기업의 형성과 발전, 쇠퇴, 그리고 재도약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목포의 경제역사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개항기부터 현재까지 5개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목포 경제를 이끌었던 주요기업들의 부침(浮沈)과 활동을 사례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제조업뿐 아니라 운수, 서비스 그리고 농업 및 수산업 부문까지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규모나 업종보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통해 목포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알아보고 몰락한 기업들은 어떤 이유로 실패했나 알고자 했다. 산업별로는 역사성, 주력산업 등을 시대별로 정리하고자 했다. 초기의 미곡, 양조, 염업, 고무, 요업, 어망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객주에서 운송, 보관 및 영업, 금융, 요식업, 극장 그리고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 발전의 축이 되는 산업들을 살펴봤다. 또한 일제 강점기

전남의 대표도시이자 항구로 발달한 면모와 그 이면에 가려진 차별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목포의 상공회의소’에서는 개항 이후 목포 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은 일본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1900년에 목포 상업회의소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상업회의소의 역사는 서울(당시 경성), 인천, 부산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조직된 상업회의소라는 점에서 목포개항 110년의 역사 중 중요한 사건인 것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과 더불어 시행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제4대 의원을 선출, 회장에 손용기를 재선임하였다. 1964년 8월 제5대 의결부가 출범하여 의원선거를 통해 (주)조선내화학공업의 이훈동(李勳東)이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지금까지의 역대 회장들이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한 역사도 기술하였다. ‘수산업’에서는 목포항 개항과 동시에 설립되었던 근대적 어시장에서부터 1897년 목포어업조합, 1911년 제령 제6호로 공포된 어업령 등을 설명하고 전용어업제도(마을공동어장), 입어제도, 보호구역, 수산 단체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목포의 수산단체들과 그 조직들의 역할을 시대별로 기술하였다.

네 번째는 ‘목포의 사회’이다. 크게 목포 시민의 정체성과 사회의식, 시민사회의 설립 및 변천,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현황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언론, 출판 외에 노동운동도 기술하였다. 목포는 호남에서 신문사가 제일 먼저 생긴 곳이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부산, 인천에 이어 세 번째이다. 1899년 6월 16일 일본인 야마모토 이와요시[山本岩吉]에 의해 일본어판으로 발행된 목포 최초의 신문으로 기록된다. 해방 후에는 손수겸에 의해 『목포신보』가 발간되었고 이어 1946년 문재철과 김철진, 강대석 등 일부 유지가 중심이 돼 『목포일보』로 바꾸어 발행했다. 『목포신보』의 후신 『목포일보』, 그리고 『목포일보』의 후신인 『호남매일』신문이 1973년 5월 31일자로 폐간되기까지의 역사가 정리되었다. 그리고 1994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 신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과정도 소개하였다. 방송의 경우 경영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포에 뿌리를 둔 방송 언론은 지역 의제를 부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과정과 앞으로 신문과 지역 방송이 어떻게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의제를 생산해내고 집중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고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목포의 복지 및 의료’이다. 미국남장로회선교부가 목포양동교회에서 목포진료소, 영흥서당, 정명여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서부터 시작한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일제 강점기 목포공생원의 설립과 해방 후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또 6·25 전쟁을 겪으며 전후 복구기에 전쟁기간의 고아, 장애인, 미망인들을 위한 구빈과정을 정리하였다. 제5공화국 이후 1981년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1982년 「생활보호법」, 1983년 「사회복지법」 대폭 개정 후의 지역의 사회복지 확대과정을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며 추진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확대, 최저임금제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의 목포 사회의 변화도 정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역사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1897년 10월 일본인 축탁의 ‘미네’가 당시 영사관 서편에 공립병원을 개업하고 이후 1890년을 전후해 영국성공회, 미국남장로회, 미국남감리회,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업을 시작하며 의료 사업을 병행한 이래 진행되어 온 의료서비스의 역사, 해방 및 6·25 전쟁 이후 공공의료시스템 및 제도가 확충되어 목포에 적용되는 과정도 정리하였다. 특히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의료보험제도가 1982년부터 1985년 목포의 약분업시험사업으로 실시되면서 의료보험시행 과정 중 목포의 역할과 진행사항 등도 정리하였다. 또한 개항 이후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의 활동과정도 정리하였다.

## 2. 역사 속에 나타난 1등 목포

목포는 1897년 통상항(通商港)으로 개항되면서 항구 도시로 성장하였다. 개항 이후 목포는 화려하게 보이는 산업화를 경험하였다. 화려한 산업화 과정이 3편 ‘목포의 산업 및 경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목포의 산업화가 모든 목포 시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민 대다수인 당시 조선인들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개항 당시 부두노동자들의 노동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어서 반제 투쟁의 큰 기틀이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신은 해방 후 지역이 민주화과정 중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동력이 되었다. 개항 이후 산업화 과정도 1등이지만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고 핍박받던 지역 노동자들의 항거정신도 1등 목포의 기틀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수산업의 경우 목포수산업협동조합 관내의 해안선 길이는 338km이며 도서가 2,100개 산재해 있다. 연안 평균 수심은 50m 내외의 얕은 대륙붕에 간석지가 있으며 이곳으로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및 내륙의 강이 유입되고 있어 다양한 각종 수산동식물의 서식과 산란에 적합한 천연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천혜적 환경과 함께 발달한 목포 수산업 또한 늘 1등을 지향하였다.

흔히 목포를 전남의 ‘정치 1번지’라고 표현한다. 또 ‘정치 1번지’로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정치 1번지’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 시작되었다. 아고라는 그리스어로 ‘함께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 집회 또는 모임 장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민회가 열렸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이곳이 바로 고대 아테네의 ‘정치 1번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종로를 ‘정치 1번지’라고 말한다. 관내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로 가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종로가 정치일번지로 부르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목포를 전남 ‘정치 1번지’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우선 1950년대부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주요 지역적 기반이었다는 점과 연계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목포정치는 자유당에 반대하는 야당도시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1955년 목포시장 불신임공작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탄압 받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기 시작했다. 1967년 제

7대 총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목포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선거구가 되면서 지역의 '정치 1번지'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유신체제의 붕괴, 민주화 물결,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때에도 목포 시민들은 민주화와 새로운 정치의 열망이 사라지는 데 격렬히 항거하였다. 당시 군과 경찰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많은 주도 인사들은 고초를 겪었다. 목포의 5월 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요 재야 인사들이 가택연금 당하고 중고등학교 수업이 중지되었으며 귀가조치가 되는 등 처음부터 행사가 강제 봉쇄되었다. 하지만 오후 10시경 3호광장 주변에 1만여 명의 시민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의 호헌세력에 대한 저항은 강력하였다. 목포 시민들의 저항은 6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6월 29일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루어졌다. 국민 스스로의 힘에 의해 쟁취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목포 시민들도 적극 동참함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1등 목포의 큰 기초가 되었다.

구한말 목포의 선교 단체는 종교 활동이 중심이었지만, 종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사업을 실천하였다. 목포는 타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곳이다. 거리에는 실업 상태의 걸인들이 많았고 어린 고아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은 차츰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못했다. 일제 강점기 사회복지정책은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방편 지원에 그쳤다. 빈민에 대한 원조는 오히려 민간부문에서 한국인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 목포는 공생원과 구도재생원이 설립되어 활발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공생원의 설립자인 윤치호는 1920년대 후반부터 당시 사회문제화되었던 부랑인들(고아, 빈곤아동 포함)을 거두고 돌보기 시작했는데,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포 지역의 사회 사업을 싹 틔우는 데 공헌하였다. 윤치호와 부인 윤학자의 봉사정신은 그들의 꿈인 '고아 없는 세상'을 위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윤학자가 태어나고 사망한 10월 31일은 UN에서 '세계 고아의 날'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1등 목포'의 큰 기반이 되었다.

의료의 경우도 목포는 전남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1876년 부산의료원이 일본인 거류지역에서 관립 제생의원으로서 최초 설립된 이후, 목포의료원도 1906년 목포 일인 거류민단 촉탁 병원을 설립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병원 중 하나로 현재 '목포의료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또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성골롬반외방전교수녀회에서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 주민의 질병퇴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성골롬반병원을 설립하였는데 후에 목포가톨릭병원으로 그 사명을 다하였으며 이제는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국내 첫 '레지오 마리아에(Legio Mariae)' 발상지인 점을 내세워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을 비롯,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등을 지을 계획이다 ‘레지오 마리에’는 ‘성모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으로,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천주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신앙단체다. 1962년 목포시, 한·노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안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개원되어 1983년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개명하였다가 2002년 다시 국립목포병원으로 개명한 국립목포병원 또한 이 지역 의료 봉사의 거점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나라 외과 전문의 면허 제1호로 큐슈국제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대구의학전문학교 교수,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원장으로 일하다 1941년부터 199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여 년간을 오직 질병에 시달리는 이 고장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헌신한 차남수 원장은 목포가 배출한 자랑스런 의료인이다. 이러한 지역의료기반과 역사도 ‘1등 목포’의 중요한 자산이다.

1등의 역사는 주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오면서 침체를 계속한다. 1960년대까지 대표적인 무역항이었던 목포항은 원양어업의 증가, 선박의 대형화에 밀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항만의 침체는 북항 개발, 삼학도 개발 등이 개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1970년대 석유파동과 이어진 삼학양조의 부도 등으로 도약을 멈추고 말았다. 다른 2차 산업 분야에서 쇠퇴를 거듭하여 대표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등 시세(市勢)도 많이 위축되어 갔다.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해방 이후 지속되어 온 목포 경제의 전반적 침체 분위기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서남해안권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각광받기 시작하여 변화를 몰고 온 자극제로 작용하였다. 침체되었던 산업단지들도 한라중공업(현 현대삼호중공업)을 중심으로 조선평화단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더욱 희망적으로 변하였다. 목포 지역은 서해안 시대, 또는 서남해안 시대의 중심으로 장차 크게 써야 할 땅, 희망의 도시로 재도약했다. 주민들 사이에는 이러한 믿음이 확산되었으며, 구체적 발전전략의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한 움직임과 많은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호남고속철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선보여졌으며 전남도청이 목포권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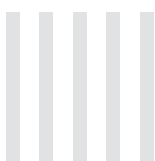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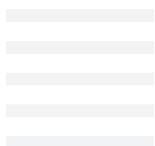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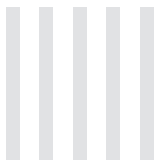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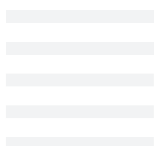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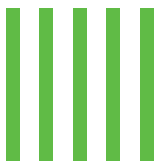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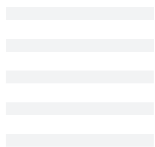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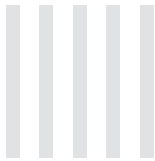
이제 새로운 목포, 세계 속으로 웅비하는 미래의 1등 목포 청사진을 그릴 때이다.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미래의 ‘1등 목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난 목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정기영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제1편

# 목포의 정치



### 제1절 제1공화국 시기: 정당정치 태동과 야당도시화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2절 제2공화국 시기: 민주당 단일 정당 내 경쟁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3절 제3·4공화국 시기: 야당도시에서 여야 동반 당선까지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4절 제5공화국 시기: 여야 동반 당선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5절 제6공화국 시기: 김대중의 정치적 후광과 민주당계의 독주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 제1장 지역정치 1번지, 목포 정치의 전개

## :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 제1절 제1공화국 시기: 정당정치의 태동과 야당도시화

#### 1. 제헌국회에서 6·25 전쟁까지: 현대 목포 정치의 태동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다양한 독립운동세력들은 자주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8월 16일 여운형과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좌우 세력이 함께 ‘건국 준비’에 돌입하였다. 전남 지역에서도 8월 17일 전남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목포건국준비위원회 역시 위원장 이남규, 부위원장 국순홍, 김백동, 내무·교통부장 유치오, 선전부장 임영춘, 치안대장 임태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직 결성을 마쳤다.

그러나 우파 세력은 2차에 걸친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앙건국준비위원회를 이탈했다. 이와 별도로 중앙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공산당 세력의 주도하에 인민공화국으로 재편됨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도·시·군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목포의 경우 역시 인민당 목포지부장이었던 국순홍과 김백동, 유치오, 임종근, 한종식, 임영춘, 박종호 등이 중심이 되어 목포시인민위원회(위원장: 국순홍)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1월 20일 열린 제1회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 목포시 대표로 김영재, 최규문, 정해룡, 박두재 등이 참석하였다.<sup>01)</sup> 특히 목포시인민위원회는 시의 행정, 치안, 적산관리 등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인근 무안, 함평, 영광 등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인민위원회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미군은 11월 14일 목포시 인민위원회에 해

\* 이 글의 모든 역대 선거 결과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역대 선거정보에 기초하였다. 이 자료의 일부 선거 결과, 특히 제1공화국 시기 등의 선거 결과는 과거 많은 문헌에서 인용한 역대 「선거편람」과 차이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자료 출처의 일관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역대 선거정보를 이용하였다.

01) 당시 전남과 목포 지역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1991, 참고.

산명령을 내렸고, 1946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수색과 연행, 체포 등을 통해 목포인민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sup>02)</sup>

이와 별도로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송진우, 장덕수 등이 중심이 된 한국민주당은 미군 진주와 함께 발 빠르게 현대적 정당조직으로 성장했다. 1945년 9월 16일 창당하여 9월 22일 중앙조직 구성을 완료한 한국민주당은 미군 환영대회, 임시정부요인 환영대회 등을 주관하여 이름을 알리는 한편, 미군정의 행정·경찰 기구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인민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했던 전남 지역의 경우 11월 초부터 도당 결성이 시작되었으며, 목포의 경우 1946년 8월 5일이 되어서야 지부조직을 결성하였다. 목포극장에서 거행된 지부 결성식에는 백여 명의 당원과 각계 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위원장 천진철, 부위원장 노기섭, 상무부장 강대석, 조사부장 김현율, 선전부장 강대석, 재정부장 주용진, 노동부장 조남기, 청년부장 차남석, 후생부장 문택호, 산업부장 김현율 등이 인선되었다.<sup>03)</sup>

한국민주당과 함께 1945~1946년경 목포에 조직을 갖춘 정당·사회단체로는 신병국(위원장), 홍순각, 강선명 등이 중심이 된 한국독립당, 설준석 위원장 중심의 신민당, 그리고 이남규를 지부장으로 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목포에서 세력이 비교적 강했던 한국독립당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세력이 중심이었으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목포지부장을 맡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남규 역시 한국독립당에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는 모든 정치 세력을 통합하고자 추진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모체로 조직되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조직결성과정에서 좌파, 중도좌파, 중도우파, 임시정부계 등이 모두 불참하여 이승만과 한민당계 등 우파 일부만이 참여한 조직이었다.<sup>04)</sup>

한편 1945년 12월 미·영·소 3국이 참여한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결의되자 한반도는 격렬한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1946년 5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소집되었지만, 이마저도 결렬되었다. 이에 1946년 10월 12일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설치를 규정한 군정법령 제11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10월 하순에는 45명의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간접선거를 실시하였고, 전남에서는 홍성하, 천진철, 최종섭, 고광표(이상 한민당), 이남규, 황보익(이상 한독당) 등이 선출되었다. 또한 11월 7일에 미군정이 선임한

02) 미군 6사단 제20연대가 목포에 진주한 것은 1945년 10월 18일이며, 미군은 10월 20일 목포부윤으로서 최섭(의사, 양동교회 장로), 경찰서장으로 임태오를 일단 임명한다. 『미군정보고서』는 당시 목포가 무질서상태에 있고, 무장한 한국인이 일본인의 재산을 강탈하였다고 보고한다.

03) 『동아일보』 1946. 08. 14. 「한민당 목포지부 결성」.

04) 1946년 우파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목포에서도 좌우대립이 본격화된다. 예컨대 1946년 4월 15일 독립촉성국민회의 목포극장 집회 습격, 그리고 6월 17일 독촉국민회 청년단원의 조선공산당 목포지부 습격과 이에 반발한 군중시위 등이 대표적이다.

관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발표되었지만 여운형을 비롯한 일부 관선 의원들이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회는 우파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집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또 다시 결렬되었고, 결국 한반도 문제는 UN으로 이관되었다. UN은 1947년 11월 14일 UN한국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남북한 동시 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지만, 북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소련군 측은 UN한국임시위원회의 입북을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UN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2월 26일 UN소총회의 결정에 따라 3월 12일 남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제헌의회선거 일자를 5월 10일로 확정하였다. 동시에 UN한국임시위원단은 보통·평등선거에 입각하여 21세 이상에 선거권을, 25세 이상에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1인 소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다수제 방식의 제헌국회 선거법을 발표하였다.

제헌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3월 30일~4월 16일 진행된 유권자 등록을 시작으로 5월 10일 유권자들의 투표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제헌국회의원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1948년 2월 16일 김구, 김규식 공동명의로 제안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한 정치세력들이 선거에 불참하여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해 버렸다. 게다가 ‘2·7 구국 투쟁’에서 ‘제주 4·3 사건’에 이르는 소요와 피습, 그리고 이에 대한 무력저지 등 제헌국회의원선거는 극렬한 좌우 갈등 속에서 실시되었다.<sup>05)</sup> 남조선노동당과 민전이 주도한 ‘2·7 구국투쟁’은 20여 일 간 전국적으로 지속되었으며, 목포에서도 철도·통신노동자와 해운노동자, 조선운송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빈민층의 식량 특별배급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4월 4일 유달산과 죽교리 등지에서 봉화가 오르면서 ‘단정 단선 반대’ 구호를 외친 시위 등은 5월의 ‘5·10선거 반대투쟁’으로 이어졌다. 물론 우익 측 역시 이러한 좌익의 ‘단정단선 반대’ 투쟁에 맞섰으며, 목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8년 2월 29일 즉각적 선거 실시를 주장하는 목포시 공무원 등 약 1,400여 명이 참여한 집회, 3월 10일 독촉국민회의 애국부인회 회원들의 UN위원단 지지 선언 집회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는 총 948명이었다. 후보자들이 표명한 정당·사회단체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명, 한국민주당 86명, 대동청년단 70명, 조선민족청년단 18명, 대한노동총연맹 10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10명 등이었고, 후보자가 10명 미만인 정당·사회단체도 40여 개(1명인 정당·사회단체 22개)나 되었다. 또한 무소속 출마자도 전체 출마자의 과반을 넘는 4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 전체 의원의 42.5%인 85명이 무소속 당선자였으며, 대한독립촉성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명, 대

05) 남한단독선거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참고.



한노동총연맹, 조선민주당, 대한청년단, 한국독립당, 교육협의회, 단민당, 대성회, 전도회, 민족통일 본부, 조선공화당, 부산일오구락부 각 1명이 당선되었다.

목포에서는 10개 사무소로 나누어 3월 30일~4월 9일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였다. 유권자 등록 결과 전체 유권자 41,278명 가운데 39,434명, 90%의 유권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에는 이남규(대한독립촉성국민회, 과도입법의원), 천동환(무소속, 직물업), 강선명(무소속, 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신(무소속, 교육자)<sup>06)</sup>, 정영소(무소속, 회사원), 김유기(대한노총)<sup>07)</sup> 등 6명이 출마하였다.

이남규 후보는 ①국민정부수립 후의 조속한 남북통일, ②국방충실로써 자주□□, ③개인의 자유권 확보, ④균등교육과 최대한의 의무교육실시, ⑤경제균등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 ⑥일제잔재인 통제경제 배제와 자유경제체제에 의한 근로대중의 복리증진 등을, 김동신 후보는 ①강토의 남북분단과 사상의 좌우분열을 민족적 자각과 □□협조로 타개, ②인민주의의 확립, ③사유권을 인정하는 기획경제체제 확립, ④남녀평등과 노동대중의 지위향상, ⑤국민교육체제의 확충 등을, 그리고 김유기 후보는 ①남북통일 민주민족국가 건설, ②근로대중의 복지와 사회적 지위 향상, ③만민공생과 균등사회의 건설, ④진보적 노동법의 제정, ⑤농민을 주체로 한 토지개혁 실시, ⑥전재동포의 구제와 국방군의 창건, ⑦남녀평등과 계급타파 등을 내세웠다.<sup>08)</sup>

목포의 제헌의회선거는 5월 7일 정견발표대회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이날 날씨는 매우 명량한 날씨였다 장소는 몇 만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 넓은 광장 예정시간 전 인데 집합장소에는 수천군중이 육속(陸續) 운집하여 야단법석이다. …… 먼저 주최측의 인사소개가 끝난 후 이십 분 간이란 짧은 규정시간이 정견발표에는 부족하나 나는 이러타는 소개말은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 드디어 강단에는 모씨가 나타나게 되어 인사의 말을 한 다음 ‘포켓토’에서 장문의 정견강령을 꼬여 내노코 去 일제시대의 통제경제를 분쇄하고 미공공출제도를 업셀 것이며 농토는 농민에게 적절히 분급해야 한다는 것을 력설한 다음 립후보자의 뼈라를 산포하였는데 청중에서 이것도 돈바람(錢風)이다 먼저 네 토지를 내노아라(립후보의 소유토지를 말함) 또 일부에서는 돈을 내노아라 하고 고함을 친다. …… 또 모씨는 말하기를 ‘나는 오로지 노동자 근로대중을 위하여

06) 김동신은 전주고보와 경성사범학교 졸업 후 북교국민학교장, 목포부교육회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07) 무안군 출신인 김유기는 서울중동학교와 동경 협정전문 수학 후 귀국하여 암태도 소작쟁의사건에 참여했으며, 해방 후 목포번영회 이사, 대한노총중앙위원, 대한노총목포지구연맹위원장 등을 맡았다.

08) 『동광신문』 1984. 04. 28. 「청백한 애국투사 목포 이남규씨(독촉)」, 「근로대중의 종복으로 목포 김유기씨(대한노총)」, 05.05. 국민재건 주장 목포 김동신씨(무소속).

공복이 되겠다고' 간곡한 애원으로 …… 또 모씨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며 몹시 미안을 표시하고 겸손보다 스스로 무자격을 시인함인지 이런 후보자도 있었다. 이려고 저려고 몇마디가 끝나자 다음 모씨가 연단에 올라스니 박수소리는 연사의 기운을 북구어 주었다. 자기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고 정당한 량심적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애국심에 불타는 열변에는 말끝마다 박수소리가 끊일 줄을 몰랐다. … 또 모씨는 이 사람은 과거 이십년간이란 긴세월을 교육계에 종사한만치 동심을 내의 마음과 같이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이 있자 일부 청취중에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와베라와고고 꾸신민나리'라는 소리에 박장대소가 버러졌다(과거 교육계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도했다는 의미). 우리는 누구나 없이 공여된 인권을 존중하는 정치를 바라는 동시 이에 따라 균등사회질서 재건을 하지 않으면 안이 된다고 말한 립후보자도 있었고 곳으로 모씨가 드디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북조선에서 일전재민으로 '류크싸크' 하나를 질머지고 남하한 사람이라고 인사말이 있자 돌연 군중석에서는 일대 혼란이 이러 났다. 나는 방공호에서 사는 사람이며 전재민이라 해도 가장 제일 좋은 전 일인소유 건물만 둘셋식 독점하고 있는 놈은 누구냐고 고성을 치며 또 일부에서는 '류크싸크'가 저렇게 훌륭하게 된 것을 보면 그 량심의 흑막은 알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수군댄 바 이어서 립후보자 말하기를 나는 우수한 선거를 시정하고 극우를 타도할 목적으로 출마한 것이다 그리고 UN조선위원단 앞에 가서 남한만 선거를 하여주시오 하고 빈 놈이 누구냐! 빈 놈이 누구냐! 빈 놈이 누구냐! 하고 삼차나 력설하자 수천 군중석에서는 집어치어라 남한선거를 빈 사람을 지적해라 남북통일을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하고 고성소리는 살기가 충천하며 장내는 일시 소란하여졌으며 이로 인하여 강연도 한동안 중지되었었다.<sup>09)</sup>

한편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난 5·10선거 반대투쟁은 목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5월 9일에는 권총을 가진 6명이 선거관리요원을 위협하고 투표 관련 서류가 있는 창고에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에는 권총을 가진 2명이 나타나 발포하면서 경관이 부상당하고, 강선명 후보와 목포 지구 선거위원장 최섭의 주택을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12일에는 나주·목포 간 전주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최종 투표결과 등록유권자 39,434명 가운데 35,24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9.4%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남규 후보가 10,361표(30.5%)를 득표하여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낙선 후보들의 득표율은 각각 강선명 24.3%, 김동신 17.9%, 정영소 14.1%, 김유기 7.4%, 천동환 5.9% 등이었다. 제헌국회의원으로 목포에서 당선된 이남규는 서울중등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

09) 『동광신문』 1948. 05. 07. 「정견발표대회를 보고 목포서 본사특파원 홍양민 기(記)」.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인민위원회 위원장, 독립촉성중앙회 목포지부 명예회장단·전남지부 총회장, 민통사무국장, 과도입법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남규 의원이 같은 해 10월 18일 관선 전라남도지사로 임명되어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1949년 1월 13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제헌의회 목포 보궐선거에는 오재균, 강선명, 안길호, 김동신, 김용무 등의 출마가 거론되었지만 강선명(무소속)과 김용무(무소속) 두 명만 출마하였다.<sup>10)</sup> 보궐선거에는 43,100여 명의 유권자 중 41,100여 명이 등록하였다. 투표 결과 무소속 강선명이 6,995표(50.26%)를 득표해 6,922표(49.74%)를 얻은 무소속 김용무를 73표차로 간신히 누르고 당선되었다.<sup>11)</sup> 보궐선거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선명은 목포에서 태어나 일본 고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독립당에서도 활동하였다.

제헌국회가 헌법 제정의 임무를 마치고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당시 948명보다 2.3배 정도 많은 2,207명이 입후보하였다. 정당·사회단체별로는 대한민국당 156명, 민주국민당 160명, 국민회 100명, 대한청년당 51명, 대한노동총연맹 29명, 사회당 28명, 대한노동당 12명, 한국독립당 12명, 독로당 13명 등이었으며, 10명 이하가 입후보한 정당·사회단체도 2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무소속 후보도 제헌국회 당시보다 무려 3.6배나 많은 1,551명에 달했다. 후보자 가운데 제헌국회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는 2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새로 국회에 진출하려는 신진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제헌국회의원선거 당시 남한단독선거에 반대하여 선거에 불참했던 중도파와 혁신 세력 등이 대거 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국민당이 전체 204석 가운데 27석을 얻어 가장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대한민국당 17석, 국민회 13석, 대한청년당 10석, 대한일민구락부 3석, 노동총연맹 2석, 사회당 2석, 그리고 민족자주연맹, 대한부인회, 불교, 독로당, 여자국민당, 노동청년연맹 각 1석 등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은 제헌국회보다 무려 20% 정도 늘어나 61%(124석)를 차지했다. 또한 대한민국당 최고위원 윤치영, 민주국민당(한민당계) 서상일, 김준연, 백남훈, 김동원, 백관수, 이영준 등과 같은 소위 거물급 정

10) 1891년 무안에서 태어난 김용무는 보성전문학교 졸업 후 일본중앙대학교 법과에 입학, 일본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한국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여 문교부장에 선임된 바 있고, 미군정 당시 대법원장과 1948년 국회 반민특위 재판관으로 일했으며, 1950년 6·25 전쟁 과정에서 강제 납북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의열단 김상옥사건, 신간회사건, 조선어학회사건, 광주학생의거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 하였으며, 보성전문학교 재단 이사장과 교장 등을 맡기도 했다.

11)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총투표자수를 초과하는 투표 결과 등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회선거위원회는 실지사항 심사결과 당선자 강선명 후보와 차점자 김용무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73표가 아닌 795표이며, 초과투표와 부정투표는 각 291표와 285표로 총 576표가 적법한 투표가 아니지만, 불법투표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수 차보다 적어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하였고, 2월 11일 국회가 보궐선거 유효를 선언하면서 강선명의 당선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동아일보』 1949. 01. 30. 「목포보선은 유효」). 한편 『동아일보』와 달리 『경향신문』(1949. 01. 28. 「물의 품은 강선명씨 목포지구당당선확인」.)은 1,915표 차이로 당선된 것이며, 초과 576표를 제외하더라도 1,200여 표 차이로 당선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치인이 낙선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한 민주국민당은 한국민주당이 제헌국회 당시 이승만의 배제전략에 직면하자 당세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국민당의 일부 세력(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신익희 세력과 대동청년단 계열 지청천 등)과 통합하여 1949년 1월 26일 창당한 정당으로 대한국민당 측의 신익희, 지청천과 한국민주당 측의 김성수, 백남훈이 최고위원을 맡았다. 대한국민당은 제헌국회 당시 원내 제1당인 민주국민당이 반이승만 운동을 전개하며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인사들(일민구락부, 신정회, 대한노동당 소속 일부 의원과 무소속)이 1949년 11월 4일 급조해 결성한 정당이다. 대한국민당 목포당부는 윤치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1950년 1월 6일 조직되었다.

목포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대한노동총연맹 임기봉(목사, 교토 도시사대학 졸, 목포지구 노총 부위원장), 무소속 정남진(농업, 전졸, 면장), 천주교총연맹 양덕표(변호사, 소졸), 민주국민당 오재균(상업, 독학, 국민회지부장), 국민회 이남규(무직, 대졸, 전남도지사), 민주국민당 김현규(무직, 대졸, 재무부세관국장), 무소속 박달배(무직, 대중퇴, 종교 강사), 대한국민당 강선명(회사원, 고졸, 대한조선공사부사장), 한국독립당 박팔천(변호사, 고문사법과 합격, 검사), 무소속 홍익선(무직, 전중퇴, 감찰위원회조사관) 등 무려 10명이 출마하였다. 이들 가운데 이남규는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 전남도지사로 임명되어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고, 강선명은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었다. 민주국민당 이름으로 오재균과 김현규 2명이 출마했지만, 민주국민당 목포시당부는 민주국민당 후보가 난립하자 3월 10일 목포극장에서 도위원장 조재규 외 수천명의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당의원대회를 열고 474명의 대의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오재균을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여 민주국민당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sup>

목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목포 유권자는 44,500여명 정도였다. 투표결과 대한노동총연맹의 임기봉이 11,853표(34.98%)를 획득해 목포 제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헌국회의원으로 출마한 대한국민당 강선명과 국민회 이남규는 각각 6,898표(20.35%)와 4,454(13.14%)를 얻는 데 그쳐 재선에 실패했다. 또한 한국독립당 박팔천, 무소속 홍익선, 무소속 정남진, 민주국민당 김현규, 무소속 박달배 등도 각각 5.1%, 4.6%, 3.5%, 1.3%, 0.8%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목포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기봉은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공립보통학교, 일본 도시샤대학,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종교계에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대한노총 목포지부 위원장, 대한노총 목포해상연맹 위원장, 대한노총 중앙본부 부위원장, 자유당 목포시당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2) 『동아일보』 1950. 03. 15. 「민국당목포시당부 국의원입후보공천」.



한편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지 한 달이 채 못 되어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부산 임시수도에서 활동하던 제2대 국회는 1952년 1월 재석 163명 가운데 143명의 반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4월에 123명이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을 체포, 연행·구금하는 등 탄압을 가한 후 7월 4일 의사당을 무력으로 포위하여 166명의 재석의원 중 163명의 동의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국민직접선출과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소위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켰다.<sup>13)</sup>

이러한 헌법 개정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최초로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6·25 전쟁 중인데다 7월 19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선거법이 공포되어 선거 준비 기간이 17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을 선출하는 1952년 선거는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출발하였다.

제2대 대통령선거에는 자유당으로 출마한 이승만 후보를 비롯하여 무소속으로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등이 출마했다. 또한 부통령선거에는 자유당의 이범석과 이갑성, 야당과 단체후보로는 조병옥, 이윤영, 임영신, 전진한, 그리고 무소속으로 함태영, 백성욱, 정기원 등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 이승만이 전체 유효표의 73.6%에 해당하는 823,587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조봉암과 이시영은 각각 14.8%와 8.9%의 선전을 보였다. 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범석이 25.5%를 득표하는 데 그친 반면, 무소속의 함태영이 41.3%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 후보가 탈락하고 무소속 함태영이 당선된 것은 이승만이 함태영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었다.

목포에서는 자유당 이승만이 60.9%(19,846표), 이시영과 조봉암이 각각 22.7%와 13.6%의 득표율을 보였다. 목포 유권자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율은 이승만의 전체 득표율보다 10% 정도 낮았다. 다만 광주의 경우 이승만 득표율이 39.7%에 불과했다.

## 2. 6·25 전쟁 이후에서 제1공화국의 종말까지: 목포의 야당도시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에 앞서 민주국민당의 강력한 반정부 공세에 직면한 이승만은 평소의 정당무용론을 버리고 재선을 목적으로 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신당 조직 의사를 밝혔다.

13) 제1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양원제가 운영되지는 않았다.

이에 이승만을 추종하는 원내외 각 단체 인사들이 신당 추진에 나섰으나, 원내외 인사들의 의견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1951년 12월 23일 원내와 원외에 별도의 자유당이 결성되었다. 제2대 대통령선거 당시까지 분열되어 있던 원내·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 이후 당 조직을 정비하였고, 1953년 5월 통합자유당을 결성하여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였다. 특히 자유당은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자유당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였다. 반면 대통령이 소속된 강력한 집권당의 등장과 정당공천에 상응하여 민주국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도 연합전선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뿐만 아니라 개헌파동 당시 어느 정도 정당의 기틀을 마련했던 민주국민당도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이처럼 제3대 국회의원선거는 강력한 집권 자유당을 견제할 정당이 부재한 가운데 치러졌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290명으로 정당·사회단체별로는 자유당 255명, 민주국민당 86명, 국민회 48명, 농민회 11명, 대한국민당과 조선민주당 각 6명, 대한노동총연맹 5명, 민중자결단과 독립노동당 각 2명, 제헌국회의원동지회, 여자국민당, 어민회, 유도회, 불교 각 1명 등이었으며, 무소속은 864명에 달해 여전히 무소속의 비율이 상당하였다. 자유당은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웠던 반면, 민주국민당은 충분히 선거를 준비하지 못해 상당수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선거 결과 자유당이 111석을 획득하였으나 민주국민당은 불과 16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밖에 국민회는 3석, 대한국민당은 2석, 제헌국회의원동지회는 1석을 차지했다. 또한 무소속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도 70명에 달해 여전히 무소속의 비중이 상당하였다.

목포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대에 이어 또다시 10명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득표경쟁이 이루어졌다. 현역 의원인 대한노동총연맹의 임기봉을 비롯하여, 자유당 유정두(변호사, 목포시의회의장), 민주국민당의 정중섭(무직, 전남도 학무과장, 상대대학장), 대한노동총연맹의 신유돈(회사원, 노충목포지구 해상연맹위원장)등과 홍익선(도의원), 안길호(회사원, 외자관리청 목포사무소장), 박희정(의사, 호남의원 원장), 김대중(해운업, 목포상선회사 사장), 이숙노(무직, 고등학교 강사)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들 가운데 현역인 임기봉과 무소속의 홍익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으로 출마한 신진인사들이다.

선거 결과 민주국민당의 정중섭 후보가 현역 의원인 임기봉 뿐만 아니라 목포시의회의 의장이었던 자유당 유정두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민주국민당의 정중섭이 8,170표(25.6%)를 득표한 반면, 자유당의 유정두는 5,806표로 얻어 2위를 기록했고, 임기봉은 겨우 2,472표(7.2%)를 얻는 데 머물렀다. 무소속의 안길호와 홍익선이 각각 4,388표와 3,838표를 득표했으며, 김대중은 3,392표(9.96%)를 얻었다. 목포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중섭은 함경남도 이원 출신으로 목포공업학교 교장, 광주서중 교장, 전남도 학무과장, 전남대 상대학장과 목포MBC 초대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11석을 얻은 자유당은 무소속 영입 등을 통하여 1954년 개헌선인 원내 2/3에 해당하는 136석을 확보하고 그해 11월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소위 3선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투표결과 의결정족수에 1표 모자라는 135표의 찬성으로 국회는 개헌안 부결을 선포했지만, '4사5입'을 적용하면 가결된 것이라면서 이를 번복하고 다시 가결을 선포했다. 이러한 '4사5입' 개헌에 반대하여 민주국민당, 개헌 불만 자유당 탈당의원, 무소속 의원 등 60여 명의 의원들은 야권 단일의 원내교섭단체인 호헌동지회를 구성하고, 신당 창당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당추진세력은 민주국민당 중심의 '자유민주파'와 혁신세력 중심의 '민주대동파'로 분열하였고, 결국 1955년 민주국민당의 자유민주파가 중심이 되어 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이에 따라 신당 참여를 거부당한 조봉암 등 혁신세력은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대통령선거에는 현직 대통령인 자유당의 이승만을 비롯하여 민주당 신익희, 그리고 창당을 추진 중인 조봉암 등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5월 5일 민주당 신익희가 사망하면서 선거는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조봉암(무소속)과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자유당)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었다. 선거 결과 자유당의 이승만이 69.98%(5,046,437표)의 지지를 얻어, 30.01%(2,163,808표)를 얻는 데 그친 무소속 조봉암을 누르고 세 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목포의 경우 자유당 이승만이 12,715표(45.25%)를 얻는 데 그친 반면, 무소속 조봉암이 이보다 많은 15,380표(54.74%)를 얻었다.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당 후보를 누르고 민주국민당 정중섭이 당선된 데 이어 대통령선거에서도 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획득하여 목포가 야권 강세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3월 애국단체연합회 주최로 5천여 명이 참여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재출마를 요청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4월에는 목포역 광장에 수만 시민이 모여 민주당 후보 지원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되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선거가 강력한 집권당과 제도화되지 못한 야당 사이의 경쟁이었다면, 이번 제4대 국회의원선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여야 양당 대결구도를 보인 선거였다. 자유당에서 후보 247명, 민주당 205명, 통일당 14명, 그리고 국민회 12명이 출마했다.<sup>14)</sup> 전체 후보자 870명 가운데 무소속 후보자는 366명(42.1%)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제3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자유당 후보 255명, 민주국민당 86명, 국민회 48

14) 『동아일보』(1958. 04. 01. 「의장단은 미정 자유당 4차 공천」.)에 따르면 자유당은 4차에 걸쳐 233개 선거구 가운데 216명을 공천하였으며, 13개 선거구는 무공천 선거구로 지정하였으며, 소속의원 131명 가운데 97명을 재공천하고 21명을 낙천시켰으며, 6명은 무공천 지구(4명은 공천포기)로 결정하였다.

명, 무소속 864명 등과 비교할 때 집권당과 제1야당 공천후보자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무소속의 비중(67.0%)도 크게 줄었다.

선거 결과 전체 의석 232석 가운데 자유당이 125석,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자유당과 민주당 양당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밖에 통일당은 2석을 차지했으며, 무소속은 26석이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진보당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즉 제3대 대통령선거 이후 1956년 11월 창당 작업을 완료한 진보당은 1957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지만, 1958년 1월 당 간부가 검거·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조봉암이 구속·기소되었고, 이어 2월 25일 정당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sup>15)</sup>

목포에서는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 자유당 유정두(목포시의회위원장), 민주당 정중섭(현역의원), 무소속 강선명(제헌의원), 통일당 김하중(전 검사), 무소속 홍익선(초대 도의원), 무소속 안길호(외자청 목포시사무소장) 등 6명이 출마하였다. 제3대 국회의원 당시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에 비하면 선거경쟁률은 다소 감소하였다. 민주당 정중섭은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유정두는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어 두 번째로 자유당 후보로 출마했다. 또한 노동당 홍익선은 제2대와 제3대에 무소속으로, 그리고 안길호는 제3대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이처럼 통일당 김하중 후보와 제헌의원을 역임한 무소속 강선명을 제외하면 모두 제3대 선거에서 서로 경쟁관계였다.

선거 전 자유당은 시당위원장인 강선명 대신 유정두를 후보로 공천하였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강선명이 공천반복진정운동 등을 전개했으며, 급기야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에 따라 유정두는 자유당 조직과 지지층을 완전히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경쟁에서 탈락한 후보가 부정투표에 의한 공천이라고 주장하는 등 공천갈등이 있었다. 게다가 1957년 8월 민주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을 탈락한 김준연이 부정투표설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사실무근으로 결론짓고 김준연 등을 제명했으며, 이에 김준연 등은 11월 통일당을 창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민주당 목포시당 사무국장 등 50여 명이 탈당하여 민주당탈당동지회 목포무안지부를 결성하고, 민주당 사무실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목포시당부는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탈당을 중용·선동하고 분열을 책동하였다는 이유로 김현양, 김하중, 문창옥 등을 제명 처분하였다.

한편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목포의 선거운동과정에는 일부 후보가 지역동원 전략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15) 1959년 2월 대법원은 조봉암에게 국가변란과 간접죄로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해 7월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한편 목포에서는 지방적 관념을 극도로 선거전에 이용하고 있었다. 어떤 입후보자는 그의 정견발표회에서 ‘목포에는 사람이 없느냐! 어째서 이북사람을 여기서 국회에 보내야 되는가?’라고 떠들고 있었으며 자유당공천에서 떨어진 모씨는 목포로 이전해온 경상도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일을 중요한 그의 선거부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sup>16)</sup>

이뿐만 아니라 부정투표와 탈법행위 등이 목포에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 민주당 정중섭은 16,041표(43.2%)를 얻었고, 자유당 유정두는 7,638표(20.6%), 무소속 강선명은 6,468표(17.4%), 통일당 김하증은 1,263표(3.4%), 노동당 홍익선은 3,484표(9.4%), 무소속 안길호는 2,256표(6.1%)를 각각 얻었다. 비록 후보공천을 둘러싼 분열이 있었지만, 민주당 정중섭이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이것은 목포가 야당도시임을 확연히 드러냈다.

1960년 3월 15일 실시된 제4대 대통령선거와 제5대 부통령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의 광범위한 선거부정행위로 촉발된 범국민적 저항의 결과 제1공화국의 종말로 귀결되었다. 사실 제4대 대통령선거는 현직 대통령인 이승만과 경쟁하던 야당 후보인 민주당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 단독의 선거였다. 이와 달리 부통령선거는 자유당 후보인 이기붕이 민주당 후보인 장면에게 패한 적이 있는데다, 장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은 조직적인 선거운동 방해, 매표와 부정투표, 경찰을 동원한 야당의 개표 참관 방해 등 불법행위를 통해 이기붕의 당선을 조작하였다. 목포에서는 유옥우, 정중섭 의원이 선거강연을 하려고 했으나 ‘폭동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장소를 빌려주지 않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각지에서 발생하였는데, 특히 3월 15일 밤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로 유혈사태가 빚어졌으며, 결국 이는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목포에서도 이승만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한 언론은 4월 26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때마침 4·19날 희생된 목포 출신 김부연(19) 군의 유해가 26일 낮 1시 20분 당지에 도착하였는데 이날 낮 12시부터 시내 학생 일천여 명이 데모를 감행하다가 김 군의 유해를 안고 이승만은 물러가라 4·19를 상기한다는 구호와 전우가를 부르면서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때 구내 광장 등 골목골목에서는 약 3만여 군중이 삼시간에 모여 데모대와 호응하여 만세를 부르고 있어 자못 공기가 험악하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않고 있어 아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sup>17)</sup>

16) 『동아일보』 1958. 04. 27. 「선거최전선 탐방 전라남도편(2)」.

17) 『동아일보』 1960. 04. 27. 「줄기찻던 각지 데모 역사 바뀌던 순간까지」.

## 제2절 제2공화국 시기: 민주당 단일 정당 내 경쟁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7일 대통령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허정 외무부 장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임명하였다. 또한 허정 과도내각은 5월 1일 3·15선거의 무효를 확인하고, 국회는 대통령 1인의 독재를 막기 위해 6월 15일 의원내각제 개헌안을 압도적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또한 개정 헌법과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1960년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 선거가 치러졌다.

1960년 7월 29일 민의원 선거는 4·19 혁명을 통한 자유당의 붕괴로 민주당의 압승이 확실시 되었다. 물론 4·19 혁명으로 인한 자유로운 정치 분위기 속에서 혁신정당들이 새롭게 등장하였지만, 혁신정당은 조직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당으로 분열되어 있어 민주당과 양자 대립구도를 만들어내는 어려웠다. 이처럼 민주당은 1960년 선거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져 공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뿐만 아니라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대거 선거에 출마함에 따라 1960년 민의원·참의원 선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신파·구파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실시되었다.<sup>18)</sup> 즉 민주당은 민의원 선거에 신파 113명, 구파 108명, 중도파 8명을 공천하였으나, 구파 혹은 신파 공천지역에 다른 계파가 출마해 전국 233개 선거구 가운데 110여개 선거구에서 신파구파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민주당명으로 출마한 후보도 301명에 달했다. 선거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분당론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계파 갈등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민주당은 민의원 전체 233석 가운데 171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였다. 반면 자유당은 2석을, 대표적 혁신정당인 사회대중당도 4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그밖에 한국사회당 1석, 통일당 1석, 기타 1석, 무소속 53석 등을 얻었다.

민주당 구파의 중심지인 호남, 특히 목포에서는 구파와 신파의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민주당에서 제3대와 제4대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된 구파계 정중섭 의원을 공천하자, 신파를 대표하여 그동안 정중섭 의원을 지원해 왔던 김문옥이 출마했다. 여기에 사회대중당의 임기봉이 가세하여 목포 제5대 총선은 후보들이 난립했던 이전 선거들과 달리 3자 대결구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포선거는 정중섭과 김문옥의 양자 대결로 펼쳐졌다. 특히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갈등 속에 민주당이 7월 10일

18) 민주당은 1955년 4사5입 개헌 당시 한민당-민주국민당 세력과 자유당 탈당세력, 그리고 흥사단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되었다. 일반적으로 한민당-민주국민당 세력을 구파로, 자유당 탈당세력과 흥사단계열 인사를 신파로 지칭하는데, 민주당내 양 계파의 갈등과 대립은 1958년 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법협상을 둘러싼 갈등에서부터 보안법 파동, 1959년 대통령선거후보 지명과정과 1960년 장면 부통령의 사임, 그리고 개헌 등에 이르기까지 창당이후 계속된 문제였으며, 결국 1960년 구파의 분당파 의원들이 신파당을 결성해 분당한다.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입후보한 김문옥을 비롯한 115명을 제명하자 신파의 김문옥을 지지한 목포시당 부위원장과 상임위의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하였다. 그래서 정중섭은 시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 김문옥이 20,144표(47.53%)로 당선되고, 정중섭은 16,538표(39.02%)를 얻는 데 그쳐 3선에 실패했다. 또한 사회대중당 임기봉은 5,693표(13.43%)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 제3절 제3·4공화국 시기: 야당도시에서 여야 동반 당선까지

4·19 혁명을 계기로 1960년 7월 29일 총선과 함께 출범한 제2공화국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1년여 만에 붕괴되었다. 정당과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활동정화법」 등으로 정치인의 정치활동 규제가 강화되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제를 골간으로 하는 제3공화국 헌법을 확정하고, 1963년 1월 1일 정치활동 재개를 허용한다. 정치활동의 재개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당결성이 이루어지는데 박정희는 여러 차례의 민정불참선언을 반복하고, “혁명 주체세력이 민간인의 자격으로 제3공화국에 참여한다.”고 밝히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다. 이에 따라 제5대 대통령선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 재집권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군정종식을 내건 구정치인이 집권해 진정한 의미의 민정이양을 이루느냐’<sup>19)</sup>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제5대 대통령선거는 46.64%(4,702,640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45.09%(4,546,614표)를 얻은 민정당의 윤보선을 근소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과정 전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박정희 후보에 대한 사상논쟁이었다. 즉 윤보선과 민정당은 박정희가 여순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반복하여 박정희 후보의 사상성에 의문점을 제시했고, 이에 박정희와 공화당은 “민정당은 한민당 이래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을 학살시키던 수법을 부리지 말라.”며 이를 공박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당선이라는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야당 후보의 난립 혹은 분열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이다. 비록 10월 2일 국민의당 후보인 허정이, 그리고 10월 7일 자유민주당의 송요찬이 후보를 사퇴했지만, 야권 후보는 민정당의 윤보선 이외에 추풍회 오재영, 정민회 변영태, 신흥당 장이석 등 3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 후보들이 얻은 표는 83만여 표에 달했기 때문이다.<sup>20)</sup>

19) 심지연, 『한국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13, 182쪽.

20) 1963년 1월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윤보선을 중심으로 반군정 세력을 통합한 단일 정당인 민정당 결성을 추진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민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박정희 후보가 농촌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윤보선 후보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소위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어서 박정희는 영광군 73.2% 등을 비롯해 여천군 71.5%, 진도군 69.5%, 영암군 68.6% 등 일부 지역에서는 70% 내외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이면서 전통적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인 목포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34.4%(15,468표)의 지지를 얻은 반면, 윤보선은 60.4%(27,122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목포 지역의 경우 민주공화당은 출범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한계를 보였던 것 같다. 즉 ‘구정치인 척결’이라는 민주공화당의 주장과 달리 6월 30일 개최된 공화당 목포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당고문으로 추대한 20여 명의 고문 가운데 3명을 제외하고 전 목포반공청년단장을 비롯하여 3·15 부정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등 목포 자유당 인사들을 고문으로 추대해, ‘자유당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sup>21)</sup> 이와 달리 윤보선은 선거유세 첫 지역을 목포로 정하고 목포의 선거열기를 광주, 순천 등으로 이어나가 야당 바람을 일으킨 반면, 민주공화당의 목포 선거 유세는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보여 목포의 선거 분위기는 선거유세에서 이미 잘 드러났다. 이러한 목포의 제5대 대통령선거 분위기를 당시 한 언론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생활고에다가 야당의 분파작용에 염증을 느껴 차라리 낮잠을 택했던 가난한 민심. 이제 차츰 잠을 깨어가고 있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긴다는 10·15선거가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각 지방의 민심들은 눈을 비벼 ‘민정의 구심력’을 찾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목포 유달산 기슭. 여기서부터 민심을 일깨운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이름 하여 ‘야당 바람’이라는 바로 그것이었다.

공화당의 ‘황소’가 홀로 달리는 이른바 ‘여당 바람’에 투덜대던 주민들은 바야흐로 옷깃을 여며 불 붙을지도 모를 여야싸움의 심판에 나설 채비를 차려가고 있다. 21일 하오 2시 15분부터 목포역전 광장에서 있었던 윤보선 민정당대통령후보의 첫 유세에 1만여 명(유권자 6만 1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를 놀라게 했다. 더구나 바로 이곳 역전광장에서 20일 하오 2시에 있었던 공화당 유세 땀 불과 5백 명(4백 명부터 7백 명 가량이라는 관측) 가량의 군중이 모였었

주당 신파의 이탈 속에 5월 14일 창당한 민정당은 김병로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대통령선거 후보로 윤보선을 지명한다. 또한 민주당 신파는 3월 허정을 중심으로 자유당계, 무소속계 일부가 창당한 신정당 합류와 당 해체를 결정하지만, 당의 고수를 주장하는 고수파가 별도로 민주당을 창당한다. 이러한 분열이 노정되면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윤보선이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7월 통합추진위가 구성되고, 8월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구당 조직책 선정과 대통령 후보 조정을 두고 민정계와 비민정계가 대립하면서 민정당은 9월 윤보선을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국민의당도 허정을 후보로 지명한다.

21) 『동아일보』 1963. 07. 31. 「돈 얻어쓰려는 패배주의」.



다는 점에서 야당 인사들의 기세를 돋우어 주고 있다. ……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목포시에서 있었던 공화당 유세의 경우였다. 공화당 목포시당 위원장인 차문석 씨는 21일 상오 목포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동 당원이 약 8천여 명 가량이라고 서슴지 않고 자랑삼아 말했다. 그러나 20일에 있었던 공화당 연설회에는 불과 5백여 명 가량밖에 모이지 않아 사실상 공화당 8천여 명 중 16분의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수수께끼 같은 결론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옛 한민당계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목포, 광주, 순천 등지를 중심으로 한 호남 지방에서는 야당의 바람이 거세다 할만큼 불어대고 있었다 할까? 전남 지방의 주요 로변에 공화당의 박정희 씨와 민정당의 윤보선 씨 등 양씨의 현수막이 걸려 있을 뿐 타당 후보의 것은 찾아 볼 수 없었다.<sup>22)</sup>

한편 박정희의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린 제5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제6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와 구분하여 정당별 지역구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전국구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정당공천제를 의무로 하여 무소속 입후보가 원칙적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 속에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이 전체 131개 지역구 모두에 후보를 공천하였고 민정당 130명,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110명, 자유민주당 116명, 보수당 80명, 자유당 40명, 정민회 35명, 추풍회 34명, 신민회 30명, 신흥당 11명, 한국독립당 9명 등을 공천하였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에서 87석, 전국구 22석을 얻어 전체 175석 가운데 109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반면, 민정당은 지역구에서 26석과 전국구 14석을 얻는데 그쳤고, 민주당은 14석(지역구 9석, 전국구 5석), 자유민주당은 9석(지역구 6석, 전국구 3석), 국민의당은 2석(지역구 2석)을 획득했다. 민주공화당이 33.5%의 지역구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62.3%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선거제도의 영향도 있지만, 야당의 분열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후보들은 선거비용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해 금권·관권 선거와 같은 부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23)</sup>

야권의 분열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준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물론 야권의 통합과 연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예컨대 민정당과 자유민주당은 합당을 위한 통합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며, 민정당과 민주당은 연합공천을 시도하기도 했다. 10월 31일 민정당

22) 『경향신문』 1963. 09. 23. 「호남의 야당 '바람」.

23) 김용호, 『한국정당정치 이해』, 나남, 2001.

정해영 사무장과 민주당 이춘기 선거사무장이 목포에서는 민주당 김대중을, 무안에서는 민정당 유옥우를 타당의 공천 없이 입후보시키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목포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차문석과 민주당의 김대중을 비롯하여 신민회 김대한, 자유민주당 오세찬, 한국독립당 이기현, 국민의당 홍익선, 추풍회 신우돈 등 7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민주공화당 중앙상임위원과 목포시당 위원장으로 3명의 공천경쟁에서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차문석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해왔으며, 부친이 목포변영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후보인 민주당의 김대중은 1954년 제3대 목포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0%의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으며, 이후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강원도 인제에 출마하려 했으나 등록 무효로 출마조차 하지 못한 뒤 나상근의 당선 무효 판정으로 실시된 1959년 재보선과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낙선하고, 1961년 5월 14일 실시된 인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만 5·16 쿠데타로 국회가 해산되어 의원직을 마감한 바 있다. 국민의당 홍익선은 해방 직후부터 오랫동안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제2~4대 목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번번이 낙선한 바 있다. 또한 신민회 김대한은 신민당 중앙당부부위원장과 남영탄광사 상무를, 자유민주당 오세찬은 승주, 곡성, 함평, 해남, 나주 군수와 삼향기업사 대표를, 추풍회 신우돈은 대한노총 목포지구해산연감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의 차문석 후보가 10,973표(27.3%)를 얻는데 그친 반면,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는 22,513표(56.1%)를 획득해 목포 제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목포가 야당의 중심 도시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한편 자유민주당 오세찬 후보는 2,615표(6.51%), 국민의당 홍익선 후보 2,534표(6.31%), 신민회 김대한 후보 606표(1.51%), 한국독립당 이기현 후보 475표(1.18%), 추풍회 신우돈 후보 414표(1.03%) 등을 얻었다.

선거 과정에서 송성용 목포시장의 예술제종합시상식과 재향군인회정치총회 등에서 “목포, 군산, 청주 등지는 야당도시이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보조를 많이 타야할 목포로서는 공화당 인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관권선거도 발생했지만, 당선된 김대중의 회고에 따르면 제6대 목포 국회의원선거는 다른 무엇보다 목포경찰서 정보반장 나승원의 경찰 부정선거 공작 폭로 사건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24) 이 사건으로 나승원과 함께 목포경찰서장 박수균 총경이 구속되지만,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 취임 전날 사면령으로 나승원 경사가 석방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수사 중단으로 목포서장도 풀려난다.

이제니까 말이지 나승원 경사를 서울로 밀송하고 또 그가 탈취해 내온 부정선거 계획서 원본 등을 서울로 무사히 보내는 데는 참으로 천신만고했었다. …… 물론 그 비밀지령 내용은 나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 목포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런 부정행위를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을 저지를 계획이 중단된 덕분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수 있었다.<sup>25)</sup>

제6대 대통령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선거는 각각 1967년 5월 3일과 6월 8일에 한 달여를 사이에 두고 실시되었다. 이에 앞선 1964년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당하고 자유민주당은 민정당과 합당하였으며, 민정당과 민주당은 한일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반대투쟁을 위해 ‘선통합·후조정’의 원칙하에 1965년 6월 통합 단일 야당인 민중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민중당 통합 전당대회에서 민정당의 윤보선 총재가 아닌 민주당의 박순천이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8월의 한일협정비준안 가결에 대한 반대투쟁을 둘러싼 강경·온건파의 대립으로, 결국 윤보선 등 민중당 강경파가 민중당을 탈당하여 1966년 3월에 신한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제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중당은 유진오를, 신한당은 윤보선을 각각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양당은 1966년 하반기 후보단일화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대통령에 윤보선, 대표위원에 유진오를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1967년 2월 7일 신민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민주공화당 역시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을 제6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제6대 대통령선거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 윤보선을 중심으로 통한당 오재영, 민중당 김준연, 한국독립당 전진한, 정의당 이세진 등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sup>26)</sup>

제5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또다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 윤보선이 실질적으로 양자 대결을 보인 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5,688,666표(51.4%)를 득표하여, 4,526,541표(40.9%)를 획득한 신민당 윤보선을 여유 있게 제치고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또한 통한당의 오재영은 264,533표(2.4%), 민중당 김준연은 248,369표(2.2%), 한국독립당 전진한은 232,179표(2.1%), 그리고 정의당 이세진은 98,433표(0.9%)를 득표했다.

목포에서는 민주공화당 박정희가 24,056표(44.2%)를 얻은 반면, 신민당의 윤보선은 27,562표(50.7%)를 획득해, 신민당의 윤보선이 민주공화당 박정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박정희가 34.4%(15,468표), 윤보선이 60.4%(27,122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제5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고 윤보선에 대한 지지는 하락해 양 후보

25) 『동아일보』 1964. 04. 04. 「『신문의 공정』 독자는 말한다-대서특필로 당선, 나경사 폭로보다 더 컸던 효과」.

26) 대중당의 서민호는 4월 28일에 후보를 사퇴하였다.

의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물론 이러한 양 후보 간 득표율 격차의 감소 양상은 서울이나 부산 등과 같은 다른 도시 지역에서도 나타나,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의 소위 ‘여촌야도’ 현상은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3선 출마를 위한 개헌을 염두에 두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헌 의식의 확보를 위해, 그리고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대통령은 당 총재 자격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초해 행정부 장·차관을 동행하고 공화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으며, “모처럼의 깨끗하고 질서 있게 끝을 맺은 5·3 대통령선거의 ‘이미지’를 완전히 씻을 만한 타락하고 혼탁한 분위기의 선거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고 민주공화당 스스로 자인할 정도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sup>27)</sup>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후인 6월 16일 타락 선거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당선된 8개 선거구의 당선자를 제명조치하기도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등 신민당의 강경한 부정선거투쟁이 영향을 주었다.<sup>28)</sup>

이처럼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진 제7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131명의 후보를 공천한 것을 비롯하여 민주당 77명, 자유당 73명, 한국독립당 70명, 민중당 66명, 대중당 64명, 통일사회당 37명, 통한당 28명, 정의당 16명, 자민당 9명 등이 출마했다. 지역구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이 102개 선거구에서 승리한 반면, 신민당은 28개 선거구에서만 의석을 확보했으며, 대중당은 1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포함하여 민주공화당은 전체 175석 가운데 129석(전국구 27석)을 차지해 전체 2/3 이상을 요구하는 개헌의석을 넘어섰으며, 신민당은 총 45석(전국구 17석)에 머물렀다. 이러한 선거 결과에 기초해 민주공화당은 1969년 9월 14일 대통령의 연임 조항을 삭제하고 3번의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한편 제7대 국회의원선거 목포 지역구에는 현역인 신민당의 김대중과 민주공화당 김병삼만이 출마하여 양자 대결이 펼쳐졌다. 민주공화당은 개헌의석 확보를 위해, 신민당은 견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인식하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은 5월 25일 목포에서 긴급경제각의를 주재하고 목포부두 정비예산 2억 1천

27)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사 1963~1973』, 1973, 409쪽.

28) 신민당은 6·8 선거를 ‘선거의 형식만을 갖춘 선거쿠데타로 규정’하고, “6·8 선거를 무효화시키려는 투쟁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사활의 기로에서 소생시키려는 슬기로운 국민의 투쟁이요, 따라서 이 투쟁은 신민당의 강화만을 위한 투쟁이 될 수 없고 항차 기개인의 당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이해투쟁으로 변질 타락시킬 수는 없다.”고 『6·8 부정선거백서』(신민당, 1967)에서 주장했다.

5백만 원 중 1억 7백만 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국유지인 삼학도의 관리권을 목포로 이관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영산강 개발, 염화공장, 특수판소자공장, 가리질비료 공장 건립 검토도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런 저런 지방사업도 야당의원이 당선되면 추진 않겠다. 지금처럼 목포가 발전되지 않아도 좋을지 목포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목포의 눈물’이 될지 ‘목포의 웃음’이 될지 두고 보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 날인 5월 26일 목포역전 광장에서 개최된 민주공화당 김병삼의 지원유세에서 “대통령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은 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은 공화당이 국회에 많이 나오면 종신대통령제를 위해 개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며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국안정을 위해 공화당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 국회에 보내야 한다.”며 “원내 안정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소임을 다할 수 없으며 지난 5·3 선거 때 내건 여러 가지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sup>30)</sup> 이에 맞서 5월 29일 김대중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유진오 신민당 대표의 목포역전 광장에서 “지방 사업은 지방자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원칙이며 국가 예산을 뜯어다가 지방 사업을 하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의 일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신민당에게 원내다수의석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당시 치열했던 양당 후보의 선거전을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sup>31)</sup>

김병삼 공화당 후보와 김대중 신민당 후보가 여야 1대1로 맞대결한 목포 선거전은 양김 후보 간의 대결만이 아니다. 처음부터 정부·여당과 신민당의 직접 대결이란 인상을 풍기면서 차원을 높였으며 박대통령의 위신과 김대중 후보의 정치생명이 맞겨워 ‘선거가 아니라 전쟁’(유진오 신민당수의 말)이라고도 일컬어질 만큼 살벌한 ‘혈전장’.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김대중이는 낙선시켜야 한다.”면서 공화당이 이른바 ‘정책지구’로 정하고 박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6·8선거에선 ‘유일무이’로 김병삼 후보 지원 유세를 벌여 싸움을 맡고 나선 느낌마저 주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푸집한 지역사업공약으로 기선을 잡아 불러일으킨 ‘공화당바람’을 그대로 순풍으로 밀어 가려는 공화당과 이를 역풍으로 바꿔 역이용하려고 신민당이 벌이는 ‘바람작전’은 목포를 온통 휩쓸었다. ‘공화당바람’을 누르려는 신민당 측의 반격작전은 5월 29일에 있는 유진오 당수의 유세 두 번에 이어 4일의 윤보선·박순천 양씨 합동유세(세 번)로 절정에 이른 느낌.

29) 『동아일보』 1967. 05. 26. 「국무위원 거의 지방출장」.

30) 『경향신문』 1967. 05. 26. 「박대통령, 목포서 유세」.

31) 『동아일보』 1967. 06. 06. 「목포의 격전」.



종반에 들어서자 드디어 싸움은 폭로와 전비(前非)들추기 등 더티 플레이로 돌변, 김대중 씨는 ‘김병삼 씨가 김구 선생 암살자’라고 폭로했으며, 김병삼 씨는 ‘김대중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했다’고 폭로하는 등 싸움은 더 이상 없는 과열선에 도달.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도 싸움이 전쟁과도 같이 과열되는 것과 정비례, 타 지역과는 달리 흥분 속에 오락가락하며 선거에 유다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양김 후보 서로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교환하고 있는 가운데 싸움에 휘말린 관과 경찰도 자극된 모양, 그래서 목포시장이 직접 김대중 후보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맞기도. 이렇게 상호비난과 공약과 선심, 그리고 폭력 등이 뒤범벅이 된 속에서 여야 두 후보자들이 남긴 말 역시 모두 과열된 것.

김(공화): 나를 국회에 보내주면 이 거리에 2주일 안에 가로등을 달고 6개월 안에 포장을 끝내겠으며, 판자집도 헐지 않고 다른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면 보내 주겠다.

김(신민): 목포시장은 시장이 아니고 김병삼 씨 선거사무장이며 동장들은 선거연락사무소장이다. 지역사업공약을 둘러싼 시비 역시 목포에서와 같이 치열한 선거구가 없는 듯. 대통령이 밀어주는 여세를 몰고 김병삼 후보는 대소 백여 개의 지방 사업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가하면 김대중 후보 역시 “능력만 있으면 야당이라도 지역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응수.

‘선거’가 아닌 ‘전쟁’을 겪는 목포의 6·8에도 이제 투표일은 눈앞에 다가왔다. 데모설과 심지어는 방화설까지 들먹여지는 이 ‘전쟁’은 그 양상이 하도 치열해서, 누구나 선거가 끝나도 ‘전쟁’은 가라앉지 않고 시비가 계속되리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이처럼 ‘전쟁’과도 같았던 목포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은 29,279표(56.3%)를 획득해 22,738표(43.7%)를 얻은 민주공화당의 김병삼을 누르고 목포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야당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된다.

개헌요구의식을 확보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기초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은 3선 개헌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과하자,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1971년으로 예정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에 돌입하였다. 신민당에서는 이미 1969년 11월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의원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기수가 되겠다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같은 40대인 김대중과 이철승이 합류하자 40대 기수론에 초기 냉소적이었던 유진산 대표위원 등 중진들이 결국 이를 받아들인다. 1970년 9월 29일 개최된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지명 대회에서는 유진산 대표위원의 추천으로 김영삼의 후보 추천이 예상됐으나, 2차에 걸친 투표에서 김대중이 이철승의 지지를 얻어 극적으로 신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

되었다. 이와 별도로 1971년 3월 17일 개최된 민주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에 따라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의 김대중 과 함께 국민당 박기출, 자민당 이종윤, 정의당 진복기 등이 경합하게 된다.<sup>32)</sup>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독재가 논란이 되었지만 '안정'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감축 신증론을 주장한 박정희와 달리 김대중은 남북한 간의 비정치적 교류, 향토예비군 폐지와 향토경비대 설치, 한·미상호방위조약 보완, 지방자치 실시, 부유세·특별세 실시 등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박정희는 6,342,828표(51.5%)를 득표해 5,395,900표(43.5%)를 획득한 신민당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정희 후보는 서울(40.0%), 부산(55.7%) 등 대도시에서 제6대 대통령선거(서울 45.2%, 부산 64.2%)에 비해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과 전남에서는 각각 35.5%와 34.4%의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여촌야도' 현상과 함께 지역투표에 따른 동서 분할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목포에서도 박정희는 18,889표(32.3%)를 얻는데 그친 반면, 신민당 김대중은 38,780표(66.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대통령선거 한 달 뒤인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공화당과 신민당 모두 공천을 둘러싼 내부적 갈등과 함께 시작됐다. 1971년 1월 공화당이 발표한 공천자 명단에 현역 의원 125명 가운데 64명만이 포함돼 공천에서 탈락한 중진 의원 등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항의와 집단 탈당이 빚어진 것이다. 신민당의 경우 선거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유진산 당대표가 갑자기 지역구(박정희 대통령 조카사위 장덕진 출마) 후보를 사퇴하고 전국구로 후보를 등록하면서 공천탈락 자들과 비주류 측이 당사를 점거하는 등의 소위 '진산파동'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내홍 속에서도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은 제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31개에서 153개 늘어난 지역구 모두에 후보공천을 마무리하였고, 국민당이 120개 지역구, 대중당은 35개, 통일사회당이 60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여 제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이 86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으며, 신민당은 65개 선거구에서, 그리고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 1개 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민주공화당은 40개의 전국구 의석을 추가로 확보해 전체 의석이 118석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구 24석을 확보한 신민당은 전체 89석을 획득했다. 비록 과반을 넘기는데 성공했지만 민주공화당의 의석률은 제7대 74%에서 56%로 크게 낮아진 반면, 제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26%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신민당의 의석률은 44%로 크게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50.6%, 신민당은 32.7%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32) 민중당의 성보경과 통일사회당의 김철도 등록을 하였지만 각각 4월 26일과 24일에 후보를 사퇴하였다.

공화당이 47.8%, 신민당이 43.5%를 득표해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4%에 불과했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는 전체 19개 지역구 가운데 유진산이 출마를 포기한 선거구를 제외한 18개 선거구에서 신민당이 승리했으며, 부산에서도 전체 8개 지역구 가운데 6개 지역구 의석을 신민당이 차지했다. 비록 민주공화당이 농촌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신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나타난 것이다.

한편 목포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주공화당의 강기천과 신민당의 김경인 간 양자 대결로 펼쳐졌다. 한 달 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나섰다 탈락한 김대중 의원이 전국구로 옮겨감에 따라 신민당에서는 신민당 중앙상무위원이자 목포시당 위원장인 김경인을, 민주공화당에서는 예비역대장이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을 역임한 강기천을 공천한 것이다. 민주공화당의 강기천은 지역개발공약을 중심으로 ‘야당도시 목포’의 발전을 위한 여당 후보 지지를 역설했던 반면, 신민당의 김경인은 김대중의 후광에 기대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지난 4·27 대통령선거 때 호남에서 거센 바람을 일으킨 신민당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의 출신구라는 데서 전국적인 관심지구. 군소정당후보 하나 없이 공화당의 강기천 예비역 대장과 김대중 씨가 전국구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 뒷자리를 물려받은 신민당 김경인 씨가 맞붙어 혈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항도목포는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4성 장군의 관록으로 용당교 가설 등 화려한 지역개발공약을 펼쳐 보이는 공화당 강 후보와 김대중 전 후보의 후광을 업고 명분 있는 선택을 호소하는 신민당 김 후보를 놓고 선택의 결단이 서지 않는 표정.

공화당 강 후보는 영암 출신이라는 약간의 핸디캡이 있긴 하지만 전 해병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의 관록을 과시, 풍부한 자금과 방대한 조직망을 활용, 도심보다는 죽교, 이로, 산정동 등 변두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파고들면서 지역개발공약에 중점을 두는 작전을 펴고 있다. 강 후보 측은 “목포시가 이십년간 야당해서 낙후했다.”고 주장, ①영암-목포 간 육교인 용당교 가설, ②13만 9천 평의 임해공업단지를 완성, 10개 공장 유치, ③목포를 수출자유항으로 만든다는 등 큼직큼직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강 후보 측은 지난 4·27 선거 때 공화당의 방대한 조직이 이른바 봄 앞에 무력해지는 것을 절감, 이번에도 유세과정에서 김대중 씨에 대한 비난은 일체 피하는 등 목포 시민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봄 조성을 억제하는데 최대의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저 조용하게 침투하는 ‘소리 없는 전법’을 쓰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귀띔.

이에 대해 신민당의 김 후보는 ‘요란한 전법’을 사용, 주로 김대중 씨의 이미지를 업고 “나를 지지해 주는 게 곧 김대중 씨를 지지해 주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김대중 봄’의 재현을 시도, 거기에

편승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따라서 김 후보는 유세 때마다 “4년 후 김대중 선생을 대통령으로 다시 모시기 위해 그 분의 손과 발이 될 이 사람을 국회에 보내 달라.”고 호소, 김대중 이미지와 김경인 이미지의 오버랩을 시도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 목포 중심으로 생산되는 천일염의 국가매상제와 배세[船稅] 철폐 등 공화당 후보 공약에 대한 대응 공약도 내세우고 있으며 변두리는 당조직을 통한 여론의 확산을, 도심지는 김 후보의 개인 친소관계를 통해 엮어놓은 사조직을 동원, 유권자들에게 파고들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또 목포유권자들이 지난 4·27 선거 때 호남의 다른 도시보다 다소 저조했던 김대중 씨 지지율(64%)에 ‘민망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신민당에 물표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

두 후보 측은 모두 일반 오천 표 내외의 표차로 서로 이긴다고 호언했다.<sup>33)</sup>

선거 결과 31,512표(54.1%)를 득표한 신민당의 김경인이 26,708표(45.9%)를 획득하는 데 그친 민주공화당 강기천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목포 제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기천은 1925년 전라남도 신안군(당시 무안)에서 태어나, 제2 공화국 당시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한편 목포에서는 개표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져 개표가 중단되고 공화당 목포지구당원이 할복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972년 6월 28일 대법원은 공화당 강기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긴장완화를 명분으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활동 중지 등 헌법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에 따라 국회의 기능을 넘겨받은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유신헌법」을 확정한다. 또한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한 유신헌법에 따라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였다. 12월 23일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박정희가 거의 만장일치(99.9%의 지지)에 가까운 투표로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제4공화국 헌법, 즉 유신헌법 부칙에 따라 1972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국회의원 선거법은 의원정수를 219명으로 하고 이 가운데 146명은 지역구에서 2인씩 직접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하며,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유신헌법(약칭 유정회)라 불리는 나머지 1/3에 해당하는 73명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도록 하였다.

33) 『동아일보』 1971. 05. 17. 「5·25 호각지대(3)」.

이러한 개정 선거법에 따라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민주공화당 80명(복수추천 7개 선거구), 신민당 87명(복수추천 14개 선거구), 민주통일당 57명, 무소속 114명 등 총 338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민주통일당은 신민당이 유진산계와 반유진산계로 분열하여 분당위기에 처하던 중 정무위원 인선에 반발한 반유진산계의 양일동 등이 중심이 되어 선명 야당을 내세우며 1973년 1월 27일 창당한 정당이었다. 선거 결과 전체 146석(73개 선거구)의 의석 가운데 민주공화당이 73석을 획득했으며, 신민당은 52석,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2석을 얻었으며, 무소속도 19명이 당선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지역구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절반 의석은 신민당과 민주통일당, 그리고 무소속이 나누어 갖는 소위 ‘여야 동반 당선’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전 선거인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석과 2석 밖에 얻지 못했던 민주공화당은 서울에서 7석, 부산에서도 4석을 얻는 등 약세를 보였던 도시 지역에서도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추천하는 유정희 의석이 73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제9대 국회에서 박정희 정부가 차지한 의석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73석에 유정희 73석을 더한 146석으로, 박정희 정권은 38.7%의 지지에도 전체 2/3의 의석을 차지했다.<sup>34)</sup>

한편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목포·무안·신안 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통합·조정되었다.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에는 제8대 국회의원선거 목포 선거구 당선자인 김경인이 신민당에서 민주통일당으로 당적을 바꾸어 출마한 것을 비롯하여, 제8대에 이어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은 강기천과 제8대 무안 국회의원인 신민당 임종기(서울대 상대졸, 국회내무위원회전문위원), 그리고 4대 민의원(무안군)을 지낸 무소속 나판수(홍익대 법률과졸, 국민사회사업연합회장) 등 4인이 출마였다.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공영제가 도입되고, 중선거구제의 도입으로 2위 후보자도 당선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후보자 간 선거경쟁은 이전 선거에 비해 그리 치열하지 않았으며, 목포 역시 마찬가지였다.

23일 오후 유달국민학교에서 열린 목포무안신안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제법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만 오천여 명의 청중이 모였다. 청중은 우산을 받쳐 들고 마지막 열기를 내뿜는 강기천(공화), 임종기(신민), 김경인(통일), 나판수(무) 등의 연설을 경청하기는 했으나 반응이 별로 없어 목포 특유의 정치적 열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런 반응을 보고 선거관계자

34) 민주공화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유정희 후보가 되는가 하면, 유정희 인사가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는 등 민주공화당과 유정희는 일정 경쟁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두 집단의 경쟁관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들은 “선거를 몇 번씩 치러 봤지만 이번에는 어찌나 표정이 없는지 판세를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면서 기권이 많을 것 같다고 걱정.<sup>35)</sup>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강기천이 가장 많은 93,213표(55.6%)를 얻은 가운데, 민주통일당의 김경인이 29,279표(17.5%)로 2위를 했으며, 신민당의 임종기는 23,560표(14.1%), 무소속의 나판수는 21,576표(12.9%)를 득표했다. 이에 따라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에서는 민주공화당의 강기천과 민주통일당의 김경인이 당선자로 확정되었다.<sup>36)</sup> 한편 목포시에서는 민주공화당 강기천이 38,735표(62.6%), 민주통일당 김경인이 13,520표(21.9%), 신민당 임종기는 4,963표(8.0%), 그리고 무소속 나판수 후보가 4,618표(7.5%)를 득표했다. 또한 목포 국회의원에 재선된 민주통일당 김경인 후보와 함께 당선된 강기천은 1927년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으며, 1946년 조선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해병대 창설 이후 연대장을 거쳐 해병소장으로 5·16 쿠데타에 참여했고, 해병대사령관으로 1969년 전역, 목포 지역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다. 한편 선거 직후인 3월 5일 신민당 선거대책중앙위원회는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 등 13개 선거구에 대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 8일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의 불법선거 억단 지시에 따라 강기천 당선자를 당에서 제명했다.

유신헌법에 따른 임기 6년의 제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1978년 12월 12일 제1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이 전체 77개 선거구에 단수 공천한 가운데 신민당은 81명(4개 선거구 복수공천), 민주통일당은 63명을 공천했으며, 무소속으로는 255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다. 무소속 후보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민주공화당과 신민당 공천 탈락자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제10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공영제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된 가운데 실시되었고, 국민들의 정치혐오감도 상당했기 때문에 선거열기가 크게 고조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민주공화당은 ‘중흥의 새 시대를 열자.’, ‘민주공화당 다시 밀어 쉬지 말고 전진하자.’라는 등의 구호를 앞세우며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의 구현, 평화정착의 추구하고 안전보장의 견실화 등을, 신민당은 ‘진짜 민심 보여주자.’, ‘공화 위에 재벌 있고 신민 위에 서민 있다.’ 등의 구호 아래 부가가치세 폐지, 구속적부심사제 부활 등을, 민주통일당은 민주헌정질서회복,

35) 『동아일보』 1973. 02. 23. 「청중 반은 없는 목포… 판세 가늠 못해 초조」.

36) 목포에서 제2공화국 당시 시의회의장을 역임하고 제8대에 이어 제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경인은 앞서 언급한 신민당 유진산 대표에 반발하여 양일동 등과 민주통일당으로 당적을 변경했으며, 1973년 일본으로 갔다가 ‘김대중 납치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하나 낙선하고, 1980년대 이후에도 민주한국당, 평화민주당, 통일국민당, 국민신당 등에서 활동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야민주세력과의 제휴, 근로삼권보장, 영세 중립화 통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운동에 임했다.

선거 결과 77개 지역구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은 6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으며, 신민당에서는 61명이, 민주통일당에서는 3명이 당선되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22명이었다. 유신정우회 77석 덕분에 여당이 과반을 넘길 수 있었지만, 민주공화당은 지역구선거에서 과반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이와 달리 신민당은 제9대 51석에서 제10대 61석으로 10석이 늘어났고, 민주공화당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31.7%인데 비해 신민당의 득표율은 32.8%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신민당이 민주공화당을 앞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야당의 유신반대 투쟁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시해되면서 유신체제의 종결로 귀결된다.

한편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 선거에는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기천 의원 대신 유정회 국회의원인 최영철이 민주공화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것을 비롯해 제9대에서 당선된 민주통일당 김경인과 낙선한 신민당 임종기,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출신의 무소속 김기열, 무안에서 3·5대와 8대 국회의원을 지낸 무소속 유옥우 후보 등이 출마하였다.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 선거 결과 민주공화당 최영철 후보와 신민당의 임종기 후보가 각각 66,730표(38.8%)와 45,256표(26.3%)를 얻어 1·2위로 당선되었다. 현직자인 민주통일당의 김경인 후보는 27,134표(15.8%)를 얻는데 그쳐 재선에 실패했으며, 무소속 김기열 후보와 유옥우 후보도 각각 16,501표(9.6%)와 16,491표(9.6%)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와 별도로 목포 선거 결과는 민주공화당 최영철 후보 30,864표(40.3%), 신민당 임종기 후보 16,172표(21.1%), 민주통일당 김경인 후보 15,648표(20.5%), 무소속 김기열 후보 8,327표(10.9%), 무소속 유옥우 후보 5,502표(7.2%)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 제2선거구 전체 선거 결과와 목포 지역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각 후보의 득표순위가 동일하지만 목포만을 볼 때 신민당 임종기 후보와 민주통일당 김경인 후보의 득표차가 크지 않다. 실제로 신민당의 임종기 후보는 무안군에서 21,923표(48.1%)를 득표해 14,550표(31.9%)를 얻은 민주공화당 최영철 후보에 앞선 1위 득표를 기록했다. 한편 전남 제2선거구(목포·무안·신안)에서 당선된 임종기는 1926년 무안군에서 태어났으며, 김대중과 함께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졸업 후 관료 생활을 하다 1971년 8대 국회의원선거 무안선거구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바 있으며, 9대에서 낙선했으나, 10대에 당선되어 12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3대에 평화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여 정계를 은퇴했다. 또한 임종기와 동반 당선된 최영철은 1935년 목포에서 태어나 목포고와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다. 기자로 활동하다 1971년 정무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1971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이후 제10~12대 임종기와 함께 목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나 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체신부장관, 노동장관, 통일원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 제4절 제5공화국 시기: 여야 동반 당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명분으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는 한편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또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확대에 반발하여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5월 31일 행정·사법·입법 업무를 통제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을 임명한다. 이에 따라 과도정부를 이끌던 최규하 대통령이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취임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유신헌법 개정과 개정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실시를 밝힌다. 이로써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새롭게 확정된 헌법 부칙 6조에 따라 10월 28일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착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대신 대통령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토록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는 한편, 국회의원선거법도 개정하여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전국구 제도를 부활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5일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0대 국회의원 210명을 포함 835명을 정치활동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심사 후 최종적으로 567명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신군부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준비를 본격화하여 1981년 1월 24일 제12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선거를 2월 11일에, 대통령 간접선거는 2월 25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 선거구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는 민주정의당 소속 후보가 53.1%로 다수를 차지했고,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후보도 31.8%에 달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소속 후보가 선거인단 당선자의 69.5%를 차지하였고, 민주한국당 소속 당선자는 7.8%, 한국국민당 0.9%, 민권당 0.4%, 무소속 21.4% 등으로 나타났다.<sup>37)</sup> 이처럼 선거인단 선거 결과에서는 커다란 이변이 없는 가운데 서울 성북 제3선거구, 서울 도봉 제2선거구, 광주 서구 제4선거구 등과 함께 목포 제1선거구에서는 민주한국당 소속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대통령선거인단의 69.5%가 민주정의당 소속이고 무소속 후보 대부분이 선거운동과정에서 전두환 지지를 공표했기 때문에 전두환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2월 25일 제12대 대통령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전두환이 4,755표(90.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

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정당사』 3, 1992.

었고, 민주한국당의 유치송은 404표(7.7%), 한국국민당 김종철은 85표(1.6%), 민권당 김의택은 26표(0.5%) 등을 얻었다.

대통령 간접선거에 이어 1981년 3월 25일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신군부가 새롭게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승리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총래 77개에서 92개로 늘어난 지역선거구에는 민주정의당이 92개 전체 선거구에, 그리고 민주한국당 91개 선거구, 민주사회당 50개 선거구, 한국국민당 75개, 민권당 81개, 원일민립당 13개, 신정당 54개, 안민당 12개, 사회당 20개, 한국기민당 15개, 통일민족당 10개, 민주농민당이 15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했으며, 무소속도 106명이 출마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신군부의 다당화 전략의 결과였으며, 특히 신군부는 이러한 다당화 전략의 일환으로 민주사회당 고제훈이 출마한 서울 강남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민주한국당과 한국국민당이 후보를 내지 않도록 종용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35.6%의 득표율에도 제주와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2곳을 제외한 90개 선거구에서 당선되었으며, 이 가운데 1위 당선자는 무려 86명에 달했다. 21.6%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한국당은 57개 선거구에서, 13.3%의 지지를 얻은 한국민주당은 18개 선거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또한 지역선거구 선거에서 민권당, 신정당, 민주사회당도 각각 2석, 그리고 민주농민당과 안민당은 각 1석을 확보했다. 한편 전체 92석의 전국구 의석은 민주정의당 61석, 민주한국당 24석, 한국민주당 7석 등으로 배분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은 지역구 90석에 전국구 61석을 합한 151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138석)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한국당이 81석으로 제1야당이, 한국민주당이 25석으로 제2야당이 되었다.

전남 제3선거구(목포·무안·신안) 선거에는 제11대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당선된 최영철과 신민당의 임종기가 각각 민주정의당과 민주한국당으로 출마한 것을 비롯해 한국국민당 장두석(신한산업 대표), 사회당 유종국(광복제인 대표), 민권당 유경현(약사), 민주사회당 진완식(전국화학노조목포지역 지부장), 신정당 박종원(진한건설 대표이사), 무소속 김병근(대한웅변협회회장), 무소속 서신배(목포 시의회의장) 등도 출마하였다. 이처럼 9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민주정의당 최영철과 민주한국당 임종기가 직전 국회의원이라는 후광을 바탕으로 우위를 보이면서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전개되었다.

최 후보는 2선의 지명도를 바탕으로 시장바닥 뒷골목을 비롯, 신안 지역의 섬까지 구석구석 누비고 있으며 임 후보는 고향인 무안의 조직 확대에 열을 올리는 한편 전통적인 야도인 목포의 특수성을 감안, 합동유세를 통해 집중적 대여 포화를 퍼붓고 있다. 임 후보는 무안에서 나온 민권의 유경

현, 사회의 유종국, 무소속의 김병근과 지역표를 나누어야 하는 여건을 안고 있는데 민한의 전국구 1번인 신안 출신 유옥우 측면 지원을 받고 있다고. 국민의 장 후보는 고향인 신안을 중심으로 참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표를 모으기에 부심하고 있으나 무소속으로 나온 서신배 후보와 지역표밭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처지이고 '민권만이 선명 야당'임을 부르짖으며 목표의 야세를 기대하고 있는 유경현 후보는 불철주야로 지면 익히기에 심혈을 쏟고 있다. 민사의 진완식 후보는 자신이 몸담았던 화학노조 등 근로자를 파고들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금배지를 꿈꾸며 공을 들여왔다는 무소속의 김 후보와 신정의 박종원 후보도 선두그룹 따라잡기에 여념이 없다.<sup>38)</sup>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최영철 후보와 민주한국당 임종기 후보가 각각 1·2위로 전남 제3선거구(목포·무안·신안)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전남 제3선거구(목포·무안·신안) 전체의 후보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민주정의당 최영철은 60,280표(33.6%), 민주한국당 임종기는 47,541표(26.5%), 무소속 서신배는 30,810표(17.2%), 한국국민당 장두석은 13,874표(7.7%), 무소속 김병근은 8,682표(4.8%), 민권당 유경현은 5,940표(3.3%), 민주사회당 진완식은 5,698표(3.2%), 신정당 박종원은 3,607표(2.0%), 사회당 유종국은 2,906표 등이었다.

목포 지역 선거 결과만을 별도로 보면 민주정의당 최영철은 30,231표(35.1%), 민주한국당 임종기는 24,123표(28.0%), 무소속 서신배는 14,239표(16.5%), 한국국민당 장두석은 4,715표(5.5%), 민주사회당 진완식은 4,479표(5.2%), 무소속 김병근은 3,361표(3.9%), 민권당 유경현은 2,711표(3.1%), 사회당 유종국은 1,397표(1.6%), 신정당 박종원은 941표(1.1%) 등으로 순위나 득표율에서 선거구 전체 결과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되었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는 제11대 국회의원선거와 전혀 다른 정치적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2월 25일 정치 활동이 금지된 555명 가운데 250명에 대한 정치 활동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1984년 2월 25일 2차 해금조치를 단행하여 202명의 정치활동을 허용했고, 11월 30일에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15명을 제외한 84명에 대해 3차 해금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해금조치 와중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1984년 5월 18일 결성)와 전직 신민당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선명 야당을 내세우며 창당 작업에 나섰으며, 민주한국당을 탈당하고 신당참여를 선언한 의원들의 합류와 함께 1985년 1월 18일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다.<sup>39)</sup>

38) 『동아일보』 1981. 03. 21. 「열기의 현장 지역구별 총선 표발점검(14)」.

39) 당시 사람들은 민주정의당을 청와대 '1중대', 민주한국당을 '2중대', 한국국민당을 '3중대'라고 비꼬아 말하곤 했다.



새로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전면적인 해금 등을 요구하며 강도 높게 전두환 정권과 민주정의당을 비판했다. 예컨대 2월 2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현행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하기 위해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 조사권을 발동토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도 선명성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1983년 유화조치 이후 급격하게 성장한 학생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세력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과 투쟁도 격렬했다. 뿐만 아니라 선거참여론과 선거거부론으로 분열된 학생운동권도 선거참여에 적극 나서기 시작해, 선거유세장에서 '군부 독재 결사반대', '민정당·민한당 반대', '민중 생존권 쟁취' 등을 외쳤다.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분위기 속에 1985년 1월 28일 1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92개 선거구에 민주정의당과 민주한국당이 92명을, 신한민주당이 90명, 신정사회당 18명, 근로민당과 신민주당 각 16명, 자유민족당이 4명을 공천하였고, 무소속으로 29명이 출마하였다. 거센 '신당 바람' 속에 2월 12일 치러진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35.3%의 득표율과 함께 지역선거구에서 87명이 당선돼 전국구 61석을 합쳐 148석을 얻어 원내 과반의석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제11대 국회에서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19.7%의 득표율로 지역선거구 26석에 전국구 9석 등 35석을 얻는 데 그쳐 제3당으로 밀려났으며, 대신 창당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은 신한민주당이 29.3%의 지지를 얻으며 지역선거구 50석,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을 확보하면서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 한국국민당은 지역선거구 15석(9.2% 득표), 전국구 5석 등 20석을, 신정사회당 1석, 신민주당 1석 등을 얻었으며, 무소속도 4명 당선되었다.

선명 야당을 내세운 신한민주당의 '신당바람'이 실제 '선거돌풍'으로 이어지면서 전두환 정권은 1985년 3월 6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을 포함한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신한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통합에 나섰으며, 4월 민주한국당 의원 30명을 비롯하여 한국국민당 의원 3명, 신민주당과 신정사회당 의원 각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 신민당에 입당, 신한민주당은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 성장하고 의회는 실질적으로 양당체제로 재편되었다. 거대 야당으로 성장한 신한민주당은 재야 정치세력, 학생운동권 등과 함께 강력한 직선제 개헌투쟁을 전개했으며, 결국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항쟁에 직면한 전두환 정권은 6월 29일 소위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수용을 약속하고, 10월 27일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확정되면서 제6공화국의 출범을 알렸다.

한편 목포·무안·신안 선거구에는 제9대 유정희 의원에 이어 제10대와 제11대에 목포·무안·신안 선거구에서 선출된 민주정의당의 최영철과 제8대 무안 국회의원을 지내고 역시 제10대와 제11대에

목포·무안·신안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한국당의 임종기와 함께 제11대에 민권당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고 새로 창당된 신한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유경현이 출마하였다. 전국적인 선거열기만큼이나 목포의 선거 분위기도 뜨거워 유달초등학교에서 개최된 합동연설회에는 1만여 유권자가 참여했다.

31일 오후 2시부터 유달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된 합동연설회는 추운 날씨에도 1만여 유권자들이 모여들어 후보자들의 열띤 공방전에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로 나선 민한당의 임종기 후보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해야 하는데 민정당 후보에 표를 던지면 대통령 직선이 어렵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한당에 표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 임 후보는 “추석이나 구정 때에 경부선은 자가용 승용차가 많은데 호남 지방으로 가는 차는 공무원들의 회사버스가 많다.”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만큼 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신한민주당의 유경현 후보는 “제5공화국 출범이후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목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목포가 살기 좋으면 목포를 떠나겠느냐.”면서 선명야당인 신한민주당에 표를 많이 던져 주도록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민정당의 최영철 후보는 “목포 시민의 식수, 광주 목포 간 4차선 도로확장 포장 등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냈다.”면서 “이번에 당선되면 4선 의원으로 호남 지방에서는 4선 의원이 혼자뿐이다.”면서 “큰 재목으로 커 목포의 영화를 되찾겠다.”고 말했다.<sup>40)</sup>

그러나 3선 관록의 민주정의당 최영철과 민주한국당 임종기를 신한민주당 유경현이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 최영철이 목포·무안·신안 선거구 전체 기준 75,877표(37.2%), 민주한국당 임종기가 67,830표(33.3%), 신한민주당 유경현이 60,034표(29.5%)를 득표해, 유경현이 탈락하고 최영철과 임종기가 4선에 성공했다. 다만 목포의 경우 신한민주당 유경현이 38,460표(37.0%)로 1위를 기록하였는데 민주정의당 최영철은 35,186표(33.9%), 민주한국당 임종기는 30,270표(29.1%)를 얻었다. 민주정의당 최영철이 신안에서 25,661표(50.0%, 유경현 17.5%)를, 그리고 민주한국당 임종기가 무안에서 20,892표(43.1%, 유경현 25.9%)를 얻은 것이 당락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40) 동아일보』1985. 02. 01. 「단상의 설전 자질 논쟁 무성」.

## 제5절 제6공화국 시기: 김대중의 정치적 후광과 민주당계의 독주

1987년 범국민적인 6월 항쟁과 6·29 선언에 이어 10월 22일 국민투표를 통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확정됨과 동시에 9월 24일부터 시작된 대통령선거법 협상 결과 정부는 제13대 대통령선거일을 12월 16일로 공고한다. 제13대 대통령선거에는 모두 8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3명의 후보가 중간 사퇴하고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민주공화당 김종필,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 등 5명의 후보가 경합했다.<sup>41)</sup>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급부상하여 야권 통합을 이룬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986년 12월 24일 당시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가 내각제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위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면서 직선제를 추진하는 김영삼·김대중 중심의 주류와 내각제를 지지하는 비주류 사이에 내부갈등이 격화되자 1987년 4월 8일 김영삼, 김대중은 계파 의원 70여 명을 탈당시킨 후 13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거쳐 5월 1일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6·29 선언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쟁취되고 7월 10일 김대중에 대한 사면·복권이 취해지자 양김의 대통령선거 출마 경쟁이 본격화되었고, 범국민적인 후보단일화 요구에도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1987년 10월 10일 김영삼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10월 28일 김대중이 신당 창당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데 이어 11월 12일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김대중의 신당 창당과 대통령 출마에는 9월 초에 이루어진 16년 만의 목포 방문과 함께 특히 연인원 50만 명(주최 측 추산 100만)이 모인 광주 방문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한편 1987년 9월 28일 김종필 전 민주공화당 총재는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신당 추진 작업에 나서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 총재 및 대통령후보로 추대되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12·12 사태'의 본질과 군정종식, '광주사태' 해결, 경제안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11월 29일 'KAL기 폭파사건'이 발생하고 선거 전날인 12월 5일 폭파범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의 광주 유세, 김대중의 마산 유세, 김영삼의 여수 유세 등 유세 도중 곳곳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유세가 중단되기도 했다.

투표결과 민주정의당 노태우가 8,282,738표(36.6%)를 얻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통일민주당 김영삼은 6,337,581표(28.0%), 평화민주당 김대중은 6,113,375표(27.1%)를,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은 1,823,067표(8.1%),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은 46,650표(0.2%)를 득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노태우는 대구 70.7%, 경북 66.4% 등 대구·경북에서, 김영삼은 부산 56.0%, 경남 51.3%, 김대

41) 사회민주당의 홍숙자가 12월 5일에 김영삼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한 데 이어, 12월 12일에 일체민주당 김선적이 노태우 지지선언과 함께 사퇴하였고, 12월 14일에 백기원이 야권단일화를 요구하며 후보를 사퇴하였다.

중은 광주 94.4%, 전북 83.5%, 전남 90.3%, 김종필은 충남 45.0% 등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야권이 패배하고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비판에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은 통합을 시도하지만 이에 실패하고 1988년 4월 26일 시행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했다. 선거에 앞서 3월 8일 민주정의당은 총 224개 의석을 1인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지역구 의석비율로 전국구 75석을 배분(제1당의 지역구 의석이 50% 미만일 경우 전국구 의석 1/2 우선 배분)하는 선거법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였다.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등록 마감 결과 민주정의당이 전국 224개 지역구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통일민주당 202개, 평화민주당 165개, 신민주공화당이 181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켰다. 통일민주당은 호남 17개 선거구에, 평화민주당은 영남 38개 지역구에, 신민주공화당은 호남과 영남 각각 17개와 15개 선거구에 후보조차 내지 못해, 선거 결과의 지역 편중이 이미 예견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1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한겨레민주당 63곳을 비롯하여 신한민주당 23곳, 우리정의당 21곳, 민중의당 16곳, 한국국민당 11곳, 제3세대당 9곳, 한주의통일한국당 6곳, 민주한국당 5곳, 사회민주당 4곳, 기독교성민당 2곳 등의 후보등록이 이뤄졌고, 무소속으로도 111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은 34.0%의 득표율로 지역구에서 87석, 전국구에서 38석을 획득해 전체 299석 가운데 125석을 얻는 데 그쳐, 제1당에는 성공했지만 과반의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19.3%의 지지를 얻은 평화민주당은 비록 통일민주당에 득표율에서는 뒤졌지만 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 등 총 70석을 획득해 제1야당으로 부상했으며, 23.8%의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통일당은 지역구 46석, 전국구 13석 등 59석으로 제2야당으로 밀려났다. 이와 더불어 신민주공화당은 15.6%의 득표율에 지역구 27석과 전국구 8석 등 35석에 머물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해야 했다. 또한 군소 정당 가운데 한겨레민주당만이 1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무소속은 9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민주정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광주의 경우 9.7%에 머물렀다. 평화민주당의 경우 역시 영남 66개 지역구 모두 당선자를 내지 못했으며 득표율도 부산 1.9%, 대구 0.7%, 경북 0.9%, 경남 1.0%, 충북 0.4%, 충남 3.8% 등에 불과했으며, 통일민주당과 민주공화당도 각각 광주 0.4%와 0.6%, 전북 1.3%와 1.5%, 전남 0.8%와 1.3% 등의 지지를 얻었을 뿐이었다. 지역에 따라 극심한 득표율 격차가 나타나는 소위 지역주의 투표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김대중의 정치적 기반인 목포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화민주당 김대중이 106,587표(93.5%)의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반면, 민주정의당 노태우는 6,337표(5.6%), 통일민주당 김영삼은

692표(0.6%), 신민주공화당 김종필은 283표(0.2%), 한주의통일한국당 신정일은 994표(0.1%) 등에 머물렀다.

목포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제9대(유정회)와 제11대에 이어 제12대 현직 국회의원인 최영철이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다시 출마했고, 통일민주당에서는 배종덕이, 평화민주당에서는 권노갑이 각각 출마하였으며, 무소속으로 안철(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장)과 차남륜(유달방역 대표이사) 등이 후보 등록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4선 관록과 국회부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민주정의당 최영철과 목포가 김대중과 평화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평화민주당 권노갑의 각축 속에 전개되었다. 민주정의당 최영철 후보는 인물론을 내세우며 ‘전남도청을 목포로’라는 구호 아래 ‘지역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달라’며 역설하고,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평화민주당 목포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평화민주당 권노갑은 김대중의 후광을 등에 업고 “내가 떨어지면 김대중 씨는 영원히 정계에서 물러난다” 면서 지지를 호소했다.<sup>42)</sup>

20일 하오 목포 시내 대성동 목포여고 운동장에서 3만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평민당의 권노갑 후보는 “30년 전부터 일편단심으로 김대중 선생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면서 “당선되면 김 선생의 뒷바라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 민주당의 배종덕 후보는 “옷이 노란색이면 어떻게 파랑색이면 어떠냐. 옷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옷걸이가 문제다. 옷 한 벌만 입고 일평생 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 민정당 최영철 후보는 “밟든 곱든 간에 앞으로 5년은 노태우 정권이 집권하게 되므로 이번 선거에 저를 당선시켜주면 나라의 제2인자인 국회의장이 되어 도청을 목포로 유치하는 등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sup>43)</sup>

또한 김대중은 권노갑에 대한 직접 지원에 나서 4월 15일 목포역 광장에서 광장과 인근 도로, 건물 옥상 등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지원 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4월 17일 목포남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연설회에서는 민정당 최영철 후보가 등단하자 권노갑 후보 지지 청중들이 야유와 함성을 지르면서 종이에 쓴 돌맹이를 던졌고 청중 사이에 최루탄 1발이 터졌으며 양당 청년 당원 사이에 각 목으로 치고받는 편싸움이 벌어져 청중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 결국 최영철 후보에게 돌을 던진 목포실업전문대생이 구속되기도 했다.

42) 『매일경제』 1988. 04. 15. 「표발24시」.

43) 『매일경제』 1988. 04. 21. 「표발24시」.



투표 결과 평화민주당 권노갑이 87,735표(84.2%)라는 예상 밖의 압도적인 득표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민주정의당 최영철은 14,568표(14.0%)를 얻는 데 그쳤다. 그밖에 통일민주당 배종덕은 593표(0.6%), 무소속 안철은 684표(0.7%), 무소속 차남륜은 618표(0.6%)를 득표했다.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평화민주당 권노갑은 1930년에 출생하여 목포상고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목포여자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김대중의 정계 진출 이후 개인비서로 활동했다.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과 김대중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제13대 당선이후 제14대에도 목포에서 당선되었고, 또다시 제15대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는 새롭게 재편된 정당경쟁구도를 기반으로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다. 제13대 총선 결과 형성된 4당구도와 '여소야대'로 인해 국정장악에 한계를 느낀 집권 민주정의당은 정계 개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야당과 통합에 나서,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통령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청와대 회담 후 3당 합당을 선언하고, 1월 30일 통일민주당이, 2월 1일에는 민주정의당이, 2월 5일에는 공화당이 합당을 위한 당 해체를 결의하고, 2월 9일 민주자유당을 당명으로 합당을 의결, 원내의석 216석의 거대 여당이 창당되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자 평화민주당은 3당 합당에 합류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잔류파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지만 이에 실패하자 1991년 4월 1차적으로 재야 세력 중심의 신민주연합당과 통합하고(당명: 신민주연합당), 이후 지난한 협상과정을 거쳐 9월 10일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통합수권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하였다.<sup>44)</sup> 또한 1992년 1월 3일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정계진출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 작업에 착수하여, 1월 10일 통일국민당 창당발기인 대회를 거쳐 본격적인 지구당 창당 작업에 나서는 한편, '새한당창당준비위원회'와 통합, 2월 8일 통일국민당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정당체제 개편과 함께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이 237개 지역구 모두에, 그리고 민주당과 통일국민당은 각각 225개와 189개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였다. 또한 신정치개혁당 111명, 공명민주당 12명, 민중당 52명 등이 지역구선거에 출마했으며, 무소속 출마자는 225명이었다. 선거 결과 민주자유당은 38.5%의 득표율로 지역구 116명, 전국구 33명 등 149석을 얻었다. 3당 합당 당시와 비교하여 크게 의석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해 또 다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29.2%의 지지를 얻은 민주당은 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 등 97석을 확보해 13대 때보다 의석이 19석 증가했으며, 통일국민당은 17.4%의

44) 통일민주당 잔류파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창당한 민주당과 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이 통합해 창당된 민주당을 구분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전자를 '꼬마민주당', 후자를 '통합민주당'이라 지칭하였다.

득표율로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 등 31석을 얻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 신 정치개혁당이 지역구 1석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으며, 무소속 당선자는 21명이었다.

목포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현직자인 민주당 권노갑을 비롯하여 민주자유당 공천을 받은 배종덕(목포MBC 프로듀서), 제13대 선거에서 평화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하고 당적을 옮겨 통일국민당으로 출마한 안철, 그리고 무소속 김봉현과 함윤식 등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권노갑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될 정도로 민주당의 정당기반이 확고했기 때문에 민주당 공천을 누가 받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현직인 권노갑 의원이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에게 지역구를 양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김홍일도 비밀리에 공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계의 반발에 부딪혀 공천에서 탈락한 김홍일이 “대표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 이제부터는 대통령선거에서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복을 밝히자 민주당은 권노갑 의원을 목포에 재공천 하였다.<sup>45)</sup>

투표 결과 민주당 권노갑은 76,486표(82.0%)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통일국민당 안철은 7,486표(8.0%), 민주자유당 배종덕은 6,580표(7.1%), 무소속 함윤식은 1,621표(1.7%), 그리고 무소속 김봉현은 1,050표(1.1%)를 득표했다.

제14대 대통령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민주자유당에서는 1992년 5월 19일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대의원 66.3%의 지지를 받은 후보로 선출된 김영삼이 출마했으며, 민주당에서는 5월 26일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60.2%의 지지로 김대중이 지명되었다. 이 밖에 통일국민당 정주영과 함께 신정치개혁당 박찬중, 대한정의당 이병호, 무소속 김옥선과 백기완 등도 선거에 출마했다. 투표 결과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9,977,332표(41.2%)를 득표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민주당 김대중 후보는 8,041,284표(33.8%)를 얻는 데 그쳤으며, 통일국민당 정주영도 3,880,067표(16.3%)에 만족해야 했다. 13대에 비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의 득표율은 경남과 경북에서 각각 19.1%와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3당 합당으로 영남 표를 대거 흡수한 것이 김영삼 당선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김대중은 경남과 경북에서 10.9%와 8.9%를 기록해 여전한 지역장벽을 실감해야 했으며, 결국 12월 19일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한편 민주당 김대중은 비록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했지만, 호남에서 또다시 91.9%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목포도 예외가 아니어서 민주당 김대중이 무려 115,118표(95.8%)를 얻은 반면, 민주자유당 김영삼은 2,557표(2.1%)에 머물렀다.

45) 『매일경제』 1992. 02. 01. 「DJ장남 민주계 반발 공천탈락」.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1996년 4월 11일 실시되었다. 이보다 1년여 앞선 1995년 6월 27일 지방 선거를 전후하여 정당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먼저 1994년부터 민주자유당 내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가 공론화되자 김종필이 1995년 1월 1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2월 9일 민주자유당을 탈당한 후, 3월 30일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였다. 자유민주연합의 창당 등으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자유당은 1995년 12월 6일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교체한다. 또한 제14대 대통령선거 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은 1995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 18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수평적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에 반대해 민주당에 잔류했던 세력은 '3김 정치'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창당한 개혁신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기본적으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통합민주당 등 4당의 경쟁구도에서 전개되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선거에는 신한국당이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새정치국민회의는 230개 지역구에, 그리고 자유민주연합은 218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세웠다. 그밖에 통합민주당이 224곳에, 대한민주당은 6곳, 무당파국민연합은 56곳, 21세기 한독당은 4곳, 그리고 친민당은 1곳에 후보를 공천했고, 무소속으로는 394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신한국당은 34.5%의 득표율로 지역구 121석, 전국구 18석을 얻어 총 139석으로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비록 신한국당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됐지만 1995년 지방선거 결과에 비추어볼 때 예상 밖의 선전이었다. 25.3%의 득표율을 기록한 새정치국민회의는 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 등 79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자유민주연합도 16.2%를 얻어 지역구 41석과 전국구 9석 등 50석에 머물렀다. 그밖에 통합민주당도 11.2%의 득표율로 지역구 9석과 전국구 6석 등 15석을 획득했으며, 무소속으로 16명이 당선되었다.

목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신한국당 배종덕, 새정치국민회의 김홍일, 통합민주당 선무일(목포시의원), 자유민주연합 이정수(전국옹변협회 전남본부회장), 무소속 서용석(목포대 교수), 무소속 이상열(변호사) 등 6명이 출마했다. 신한국당 배종덕은 14대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경험이 있으며, 제14대 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던 김홍일은 권노갑 의원이 목포 지역구를 포기하고 무안에 출마하려다 전국구로 옮겨 감에 따라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게 되었다. 김대중의 장남인 김홍일이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로 출마하면서 목포 선거는 다른 무엇보다 김홍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전남 목포시 용당동 목포상고에서 6일 오후 열린 목포·신안 갑 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는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형형색색의 우산을 받쳐 든 2천여 명의 청중이 모여 후보자의 연설을 경청. 특히

이날 연설회 도중 첫 연설자인 신한국당 배종덕 후보가 국민회의 김홍일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을 해 20여 분 동안 유세가 중단된 데 이어 무소속 서용석 후보도 ‘부자세습’ 발언을 했다가 국민회의 당직자들이 “무슨 소리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연설이 또다시 10분여 동안 중단되기도. 첫 번째로 등단한 신한국당 배 후보는 “목포의 토종인 나만이 21세기의 목포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하며 한 표를 호소. 민주당 선무일 후보는 “국민회의 김홍일 후보가 목포를 대변할 자격과 능력을 검비했는지 판단해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며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장남인 김 후보를 겨냥.

자민련 이정수 후보는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회의가 자민련에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조 없이는 정권의 수평적인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창구 노릇을 할 나에게 표를 몰아 달라.”고 목청. 무소속 서 후보는 “9대에 걸쳐 DJ가 목포 선거를 좌지우지해 유권자들을 선거틀러리로 이용했다.”고 주장. 마지막으로 연설에 나선 국민회의 김 후보는 타 후보의 부자 세습 및 신체 결함 비난과 관련, “공군장교 출신인 나는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다 고문으로 다리를 절게 됐다.”며 “어느 후보가 군사독재정권에 몸으로 항거한 전력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부자 세습이 아니라 나의 민주화 투쟁 하나만으로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sup>46)</sup>

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홍일이 70,987표(81.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목포 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밖에 무소속 이상열 8,156표(9.3%), 신한국당 배종덕 4,339표(5.0%), 무소속 서용석 2,949표(3.4%), 통합민주당 선무일 663표(0.8%), 자유민주연합 이정수가 290표(0.3%)를 얻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12월 17일 실시되었다. 선거에 앞서 김대중 총재 중심의 새정치국민회의와 김종필 총재 중심의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총선 이후 공조에 기반하여 후보단일화 협상에 나서 1997년 10월 31일 대선 후보를 김대중으로 단일화하고, 총리는 자유민주연합이 맡으며,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는 소위 ‘DJP연합’을 이루었다. 신한국당은 1997년 7월 21일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가 이에 불복하여 9월 13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이인제를 지지하는 탈당파들은 11월 4일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이인제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이러한 분열에 직면한 신한국당은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 199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을 출범시키고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이밖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계는 진보 진영

46) 『연합뉴스』 1996. 04. 06. 「‘유세현장’ 목포·신안갑 합동유세」.

의 독자적 대통령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건설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권영길 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 등과 함께 공화당 허경영 후보, 바른정치연합 김한식 후보, 통일한국당 신정일 후보 등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이 10,326,275표(40.3%)를 얻어 9,935,718표(38.7%)를 득표한 한나라당 이회창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었다. 김대중은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와 1987년 제13대 그리고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등 3차례 낙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선거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한편 국민신당 이인제는 4,925,591표(19.2%)를 얻어 3위에 그쳤으며, 건설국민승리21 권영길은 306,026표(1.2%), 바른정치연합 김한식은 48,717표(0.2%), 그리고 통일한국당 신정일은 61,056표(0.2%)를 득표했다. 목포에서는 지난 제13대와 제14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이 다시 한 번 94.6%(136,421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1997년 대통령선거 승리를 가져온 'DJP 연합'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내각제 개헌에 대한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입장 차이로 인한 대립이 격화되면서 1999년 7월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등은 내각제 개헌 공식 유보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개혁적인 신진 인사를 영입해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고 자유민주연합과 정당통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연합은 새천년민주당이 강령에서 내각제를 배제하고, 특히 시민단체가 김종필 등 자유민주연합 지도부가 대거 포함된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자 이에 크게 반발해 2월 16일 민주당과의 공조를 공식 파기했다.

이처럼 'DJP 연합'이 붕괴하고 집권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천년민주당으로 재편된 가운데 2000년 4월 13일 제16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종전 253개에서 227개로 줄어든 지역구 선거에는 한나라당 225명, 새천년민주당 170명, 자유민주연합 170명, 민주국민당 124명, 희망의한국신당 21명, 공화당 4명, 민주노동당 21명, 청년진보당 46명, 그리고 무소속 202명이 출마했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39.0%의 득표율로 지역구 112석과 전국구 21석 등 133석을 얻어 제1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은 35.9%의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구 96석, 전국구 19석 등 115석에 머물러 제2당에 만족해야 했다. 자유민주연합은 15대 18.4%에 비해 9.8%로 득표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의석수도 55석에서 지역구 12석, 전국구 5석 등 17석으로 크게 줄었다. 이밖에 민주국민당이 3.7%를 득표해 지역구와 전국구 각 1석을 얻었으며, 한국신당도 지역구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202명 가운데 당선자는 5명이었다.

목포에서는 현직자인 새천년민주당 김홍일과 제14대와 제15대에 이어 이번에도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배종덕의 양자 대결이 펼쳐졌다. 선거 결과 새천년민주당 김홍일이 87,354표(91.8%)를 얻어 7,818표(8.2%)를 얻은 배종덕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002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한 대통령후보 선출이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 들어 각종 비리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새천년민주당은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여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전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새천년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은 2002년 3월 9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경선은 울산, 광주 등에서 노무현이 1위를 하며 소위 '노풍'이 일어나면서 노무현과 이인제 후보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이후 후보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진 이인제 후보가 4월 17일 후보를 사퇴했고, 4월 27일 노무현이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선출되었다. 정당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한나라당은 국민경선제 도입을 포함한 정당개혁을 요구하는 박근혜의 탈당으로 이회창 대세론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자 이를 수용하여 국민경선제를 실시했다. 2002년 5월 9일 막을 내린 한나라당 국민경선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한편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기반으로 인기가 급상승한 정몽준 의원은 2002년 9월 1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창당 작업에 착수하여, 11월 5일 국민통합21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정몽준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과 국민통합21 정몽준의 단일화협상이 시작되었고, 11월 24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제16대 대통령선거는 한나라당 이회창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양자 대결구도가 형성되었으며, 그 밖에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사회당 김영규, 호국당 김길수 등도 선거경쟁에 참여했다. 선거과정에서는 2차 북핵 위기, 미군 장갑차 사고에 따른 SOFA 개정 논란과 대규모 촛불시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 등이 크게 이슈화되었으며, 자발적 후보 지지조직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소위 '노사모'의 등장도 크게 주목을 끌었다.

선거 결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이 12,014,277표(48.9%)를 얻어 11,443,297표(46.6%)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을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한편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은 광주 95.2%, 전북 91.6%, 전남 93.4% 등 새천년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도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김대중과 이회창의 득표율 격차를 축소하였다. 이와 별도로 목포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이 무려 122,517표(95.9%)를 득표한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은 3,725표(2.9%)에 머물렀다.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의 당선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지만, 집권 초기부터 당 개혁과 지도부 개편,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법 공포, 4·24 보궐선거 패배 책임론 등으로 내분이 격화

되었고, 결국 2003년 9월 20일 한나라당을 탈당한 의원 5명과 함께 총 41명의 의원들이 ‘국민참여통합신당’이라는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등록했다. ‘국민참여통합신당’은 9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탈당과 신당 지지 선언에 힘입어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유시민 의원 중심의 개혁국민정당과 함께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비리 관련 특검법 등에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 3당의 공조가 본격화되었는데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빌미가 되어 2004년 3월 9일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되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던 와중인 2004년 4월 15일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자연스럽게 ‘탄핵 심판론’과 소위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급상승한 열린우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거여 견제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은 전체 243개 지역구 가운데 129곳에서 승리하는 한편 56석의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당투표에서도 열린우리당은 36.3%라는 가장 높은 득표율로 23석을 확보해 총 152석을 획득해 선거전 47석에 불과했던 여소야대를 뒤엎고 원내 과반수를 넘기게 되었다. ‘탄핵역풍’을 박근혜 대표체제로 막아선 한나라당은 지역구 100곳에서 승리하고 비례대표선거에서도 35.8%의 득표율로 21석을 배분받아 총 121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은 지역구선거에서 불과 5석을 얻는 부진함을 면치 못했는데 비례대표선거에서도 7.1%의 득표율에 4석을 얻는 데 그쳐 총 9석이라는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자유민주연합 역시 지역구 4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그마저 정당득표율은 2.8%에 불과해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는 데 실패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곳에서 승리하고, 정당투표에서도 13.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 비례대표 8석을 배분받는 등 총 10석을 차지해 원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목포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새천년민주당 이상열, 열린우리당 김대중, 민주노동당 최송춘, 그리고 무소속 배종덕 등이 출마하였다.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새천년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목포는 민심이 크게 분열하였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인 새천년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에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커다란 관심사였다. 새천년민주당은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목포지구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결정하였고, 목포지구당은 이상열, 정영식, 양지문, 이광래, 최기동, 김유배 등 6명이 경선후보로 나서 12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당원과 후보추천 시민 등 2,911명이 참여한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이상열을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선출하였

다.<sup>47)</sup>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목포시의회 의장 김대중을 후보로 공천하였다. 이밖에 민주노동당도 민주노동서남지구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최송춘을 후보로 공천하였으며, 제15대에 신한국당, 제16대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배종덕은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다.

김홍일(金弘一) 의원의 비례대표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 목포에서는 이곳이 김대중(金大中, DJ)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의식한 후보들이 앞다퉈 ‘DJ정신 계승’을 주장, 탄핵정국과 함께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후보 측은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김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당은 민주당’이라며 ‘DJ 평화공원’ 조성과 노벨상 수상자 초청 세미나, 평화 마라톤 개최 등 DJ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탈당한 열린우리당의 후보가 이제 와서 DJ를 거론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DJ의 아들인 김홍일 의원이 이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DJ의 의중이 실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김대중(金大中) 후보 측은 “DJ의 햇볕정책을 부정하는 한나라당과 공조한 민주당 후보를 심판해야 하고 우리당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DJ의 오랜 꿈이었던 지역주의 극복이 실현될 수 있다.”며 “DJ가 현실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약속한 만큼 김홍일 의원의 민주당 후보 지원은 DJ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낙후된 지역경제발전과 관련해 김 후보는 우리당의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과 고속철도 호남선 전용선 착공문제 등을 거론하며 ‘힘 있는 개혁여당’을 밀어야 목포 경제가 발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후보는 ‘DJ평화공원’ 조성으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신도청 이전사업을 마무리 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탄핵정국 등과 맞물려 20~30대 젊은층에서는 우리당이, 40대 이상에서는 민주당이 앞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 후보의 ‘일꾼론’과 김 후보의 ‘민주당 심판론’ 중 어느 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파고드는가와 30% 정도로 추정되는 부동산의 향배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전국사회보험노조 중앙운영위원인 최송춘(崔松春) 후보가 “목포를 진보정치의 1번지가 되게 하겠다.”는 기치로 표발을 누비고 있으며 지난 제15·16대 총선에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던 MBC 프로듀서 출신의 배종덕(裴鍾德)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다시 한 번 ‘금배지’의 꿈에 도전한다.<sup>48)</sup>

47) 경선에서는 이광래 182표, 이상열 656표, 정영식 354표, 양지문 134표, 김유배 380표, 그리고 최기동이 422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48) 『연합뉴스』 2004. 04. 09. 「'선택 4·15' 전남 목포」.

선거 결과 새천년민주당 이상열이 48,745표(50.9%)를 득표하여, 38,832표(40.5%)를 얻은 열린우리당 김대중을 누르고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 최송춘과 무소속 배종덕은 각각 4,605표(4.8%)와 3,593표(3.8%)를 얻는 데 그쳤다. 한편 정당투표 결과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투표와 달리 열린우리당이 40,594표(42.5%)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새천년민주당은 38,456표(40.3%)로 2위에 머물렀고, 민주노동당도 11,091표로 11.6%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한편 목포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상열은 1952년 무안군에서 태어나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1982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15대 목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했으며, 이후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단일화로 후보를 사퇴했고, 2014년 목포 시장선거에서 낙선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2007년 2월부터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준비에 나서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선거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명박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하였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내부 혼란에 빠졌고, 탈당과 분당, 합당 등 수차례 이합집산이 반복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재편되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뒤늦게 경선 준비에 착수해 2007년 10월 15일 대통령선거 후보 지명대회에서 정동영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선출에 이어 10월 16일 민주당도 이인제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고, 11월 7일에는 두 번이나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지냈던 이회창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밖에 창조한국당 문국현이 8월 23일 이미 대통령선거 출마를 밝힌 바 있었고, 9월 15일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의 선출된 바 있어, 제17대 대통령선거는 6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다자구도로 전개되었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11,492,398표(48.7%)를 득표해 6,174,681표(26.1%)를 얻는 데 그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을 커다란 표차로 누르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목포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83,225표(80.1%)를 얻었지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얻은 절대적 지지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2008년 4월 9일 실시되었다. 선거에 앞서 제17대 대통령선거에 패배하고 10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대통합민주신당은 새로 취임한 손학규 대표의 주도 아래 민주당과 통합작업에 착수해 2008년 2월 17일 통합을 의결하고 18일 통합민주당으로 합당신고를 완료하였다. 또한 제17대 대선에서 나섰던 이회창은 보수신당 창당에 나서 2008년 1월 10일 자유선진당을 창당하였고, 민주노동당에서도 소위 '평등파'와 '자주파' 사이에 노선투쟁이 격화되면서 '평등파'가 탈당하여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은 '공천학살'로 비유되는 공천으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으며, 통합민주당도 공천기준을 둘러싸고 커다란 내홍을 겪기도 했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은 전체 245개 지역구 가운데 131개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37.5%의 정당투표 득표율로 비례대표 22석을 배분받아 과반을 넘는 153석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통합민주당은 지역구 66석, 비례대표(득표율 25.2%) 15석 등 겨우 8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새롭게 창당된 자유선진당은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4석 등 18석으로 제3당이 되었으며,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친박연대도 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 등 14석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은 5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3석), 창조한국당은 3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차지했으며, 무소속으로도 25명이 당선되었다.

목포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김대중, 박지원, 배종호, 이상열, 정영식 등이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치열한 공천경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부정·비리 전력이 공천배제 방침에 따라 박지원과 그리고 ‘호남 지역 현역의원 30% 물갈이’를 천명하며 현역의원인 이상열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배종호, 정영식의 3파전으로 압축된 공천경쟁에서 통합민주당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영식을 최종 공천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박지원과 이상열은 이에 반발해 통합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천성복, 민주노동당 윤소하, 그리고 평화통일가정당 최승규 등도 출마했지만, 선거는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영식과 무소속 박지원, 그리고 무소속 이상열 등 3파전의 양상을 보였다.

선거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정영식은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정영식을 선택했다.”며, “탈당한 사람들이 감언이설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가짜 민주당을 격퇴하기 위해 진짜 민주당 후보인 저에게 표를 몰아 달라.”라고 역설한 반면, 무소속 박지원은 “DJ의 정통성을 이은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고 손학규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라며 “국정경험과 강한 추진력이 있다. 위기에 빠진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박지원을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현직자인 무소속 이상열은 “지난 4년간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운동과정에 박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무안에 출마한 김홍업 의원 등을 동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목포를 방문해 “박 실장은 남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4월 4일 무소속 이상열과 통합민주당 정영식은 “목포 시민들이 동교동 세습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후보단일화를 선언하고, 4월 5일 단일화 후보로 통합민주당 정영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 중반 목포의 선거는 통합민주당 정영식과 무소속 박지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었다.

선거 결과 무소속 박지원이 45,415표(53.5%)를 얻어 32,271표(38.1%)를 득표한 통합민주당 정영식을 누르고 목포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다른 후보의 득표는 민주노동당 윤소하 4,695표



(5.5%), 한나라당 천성복 1,802표(2.1%), 평화통일가정당 최승규가 565표(0.7%)를 얻었다. 목포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지원은 1942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 1980년대 초 뉴욕 한인회장을 지내다 김대중과 인연을 맺으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천 소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통합당 후보로 목포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는 2012년 4월 12일 실시되었다. 선거 전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와 2012년 2월 2일 통합을 이루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 통합민주당 역시 야권통합에 나서 시민통합당(‘혁신과 통합’으로 출발)과 한국노총 세력 등과 통합, 2011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또한 민주당 주도의 야권통합에 비판적이었던 진보진영은 독자적인 통합에 나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등은 2011년 12월 5일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한편 후보공천과정에서 통합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서울 노원 병, 경기 고양 갑 등 16곳에 통합진보당 후보를 단일 후보로 전략 공천하고 76곳은 단일화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야권연대를 추진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석, 비례대표 25석(득표율 42.8%) 등 152석을 얻어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당시 174석보다 의석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과반의석을 넘기는 데 성공했다.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은 당초 기대와 달리 지역구 106석, 비례대표 21석(득표율 36.5%) 등 127석을 얻는데 그쳤으며, 통합진보당도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득표율 10.3%) 등 13석에 머물렀다. 이 밖에 자유선진당이 지역구 3석, 비례대표 2석(득표율 3.2%) 등 5석을 획득했으며, 무소속도 3명이 당선되었다.

목포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는 제18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민주통합당 박지원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윤소하 후보, 민주통일당 정일용 후보, 무소속 배종호 후보 등 4명이 출마하였다. 민주통합당 박지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박지원 후보 선거사무원 등록 문제 등이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 민주통합당 박지원이 63,705표(71.2%)를 얻어 목포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밖에 통합진보당 윤소하가 14,587표(16.3%)를, 무소속 배종호는 10,685표(11.9%), 민주통일당 정일용은 524표(0.6%)를 득표했다. 한편 목포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이 64,319표(72.8%)를 얻었고 통합진보당 13,277표(15.0%), 새누리당 4,867표(5.5%), 진보신당 819표(0.9%), 자유선진당 809표(0.9%), 창조한국당 287표(0.3%), 그리고 친박연합이 70표(0.1%) 등을 득표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었다. 새누리당은 8월 19일 선거인단 투표와 20일 대의원과 당원 투표, 그리고 사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박근혜를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하였다.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 모바일 투표를 새롭게 도입한 민주통합당은 8월 25일 제주지역 경선에서 시작하여 9월 16일 서울지역 경선을 마지막으로 문재인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한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대중적 지지가 급상승했던 안철수는 9월 19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문제가 급부상했으나 단일화 협상이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가운데 11월 23일 안철수가 대통령선거 후보 사퇴를 선언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 이정희도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후보를 전격 사퇴하였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중심의 '동교동계' 일부를 영입한 데 이어 10월 25일 선진통일당(구 자유선진당)을 흡수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문재인의 양자 대결로 압축된 선거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가 15,773,128표(51.6%)를 얻어 14,692,632표(48.0%)를 득표한 민주통합당 문재인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편 목포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가 11,971표(8.5%)를 득표한 데 비해 민주통합당 문재인은 128,448표(91.2%)를 득표하였다.

김영태 |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